

협동조합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왜 협동조합은 규모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참여할까, 말까?

아름다운
여름
이벤트

생협평론 2011 여름 (3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iCOOP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1년 6월 21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전 화	02) 2060-1373 / 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1 여름 (3호)

길잡이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7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울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22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 (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35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시스템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7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 (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62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72
----------------------------	--------------------	----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84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95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06
-----------------	-----------	-----

돌발논문

에너지 위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107
--------------------------	-----------------------	-----

서평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오귀복 (아산YMCA생협 이사)	120
---------------------	-------------------	-----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124
----------	----------------------	-----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매호 그랬지만 이번 3호 역시 특집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이 쉽지 않았다. 편집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우리가 협동조합을 제대로 잘 알고 있기는 한건가?”라는 문제 제기가 채택되었다. 규모가 커지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 등에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회의가 끝나고 적합한 필자들을 선정하고 섭외하는 단계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논객이 기대보다 적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검색의 축에 잡힌 글들은 대개 ICA가 세계에 알려진 협동조합의 원칙이나 규범들을 소개하는 교육용 자료들이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결과의 양적, 질적 축적을 일견해 본 결과, 한국 협동조합 진영에서는 협동조합 일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대는 논외로 하고, 현대적인 협동조합의 역사를 해방 이후부터로 상정할 때, 한국 협동조합사가 6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협동조합은 소개의 대상이거나 각 조직 사례별 정책 연구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 한국사회라는 맥락에서 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쉬운, 혹은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가 우려했던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기획을 3호 특집으로 확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정태인에게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전 협동조합연구소장 장종익에게는 “사업에 치중하고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한국보다 규모가 훨씬 큰 일본 생협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있는지, 일본의 생협 전문가 마루야마 시게키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핵심어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풀어줄 것을 정찬을 ‘친환경유기식품유통 인증협회’ 사무국장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3호의 특집논문 4편이 태어났다.

독자들이 이 논문들을 가져다가 스스로의 ‘협동조합론’을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해주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 특집을 계기로 주체적인 협동조합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생협평론>은 창간호로 6만부를 찍었고 2호부터는 4천부로 줄었다. 생협평론을 구하려는 독자들의 전화를 받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발행 부수는 줄여나갈 것이다. 부수를 조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접근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면 종이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협평론의 발행을 통해서도 윤리적 생산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홈페이지에서 PDF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협동조합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시스템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협동조합 등 : 역자) 결사체 형태(*the form of association*)는, 인류가 계속 발전 시킨다면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임에 틀림없다... 노동자 자신의 결사체가 평등, 자본의 집단적 소유를 기초로, 스스로 선출하고 또한 바꿀 수 있는 경영자와 함께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존 스튜어트 밀)

협동(*cooperation*) - 인류 생존의 비결

협동조합에는 협동이란 말이 들어 있다. 협동은 인류 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명이었던 다윈을 죽을 때까지 괴롭힌 과제였다. 자신의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오직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례에서 동물들은 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례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다윈은 협동하는 집단이 더 우월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을 뿐 협동의 조건을 파헤치는 데 이르지 못했다.

협동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근년에는 경제학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적 딜레마란 사회(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논술 시험 덕에 요즘 고등학생들도 잘 알게 된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딜레마’ ‘공공재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딜레마이다. 어느 경우든 인간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사회 전체에 비극이 초래되고 당연히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도 불행해진다. 전 인류의 생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맞닥뜨린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딜레마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 딜레마 게임(죄수의 딜레마, 사슴사냥게임, 치킨게임)은 답이 어디에 있는지 간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유

명한 죄수의 딜레마는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낳도록 설계되어 있다.

C는 협동, D는 배반(무임승차)을 나타내며 보수를 나타내는 각 칸의 첫 번째 숫자가 경기자 I(나)의 보수이고 두 번째 숫자가 경기자 II(상대방)의 보수이다.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각 칸의 나의 보수(앞 숫자)만 비교해서 더 큰 쪽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보수가 $(D,C)=4 > (C,C)=3 > (D,D)=2 > (C,D)=1$ 의 순서라면 언제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된다. 상대방이 협동(C)을 선택했을 경우 내 보수는 $C=3, D=4$ 이므로 D를 선택할 것이고, 또 상대방이 배반(D)을 선택한 경우에도 내 보수는 $C=1, D=2$ 이므로 역시 D를 택해야 한다. 즉 상대가 배반을 하든, 또는 협력을 하든 나는 배반을 하는 게 이익이다. 상대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므로 우리는 동시에 배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표 1> 죄수의 딜레마 게임

		경기자 II	
		C	D
경기자 I	C	3.1	1.4
	D	4.1	2.2

일부러 꾸며낸 숫자의 예처럼 보일 테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상황은 널려 있다. 혹시 내가 그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을 때 자문해봐야 할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렇다. “남이 다 하면 나도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공포), 그리고 “남이 다 안 하는 경우 나만 하면 ‘대박’이다.”(탐욕) 이 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사교육과 부동산(주식)에 대한 우리 태도가 대표적인 예다. 남들이 다 과외 시키는데 우리 아이만 마냥 놔둘 수 없고, 남들이 다 빚내서 집사는데 나만 유유자적, 안빈낙도 하다가 영원히 셋방살이 신세일 거 같고, 반대로 남들이 다 안 하는 경우 어디 값 싸고 좋은 과외 선생이나 잘 나갈 땅이 없나, 기웃거리는 우리는 바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사회적 딜레마 게임은 둘 다 협동을 택할 때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인류가 정말로 이기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절멸했을 것이다. 인간은 협동의 지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교육이나 부동산 투기의 예에서 보듯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다. 언제 우리는 협동할 수 있는 걸까?

인간협동의 조건과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지난 20여 년 동안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 행동/실험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 협동하는가”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들을 찾았는데 하버드대의 생물학 및 수학과 교수인 노박은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¹

첫째는 ‘혈연 선택’이며 생물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답이다. 꿀벌이나 흰개미,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광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협동, 그것도 자신을 희생하는 협동 대부분은 핏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설적인 생물학자 할데인은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면 1/2의 확률로 자신의 유전자를 살리는 것이고, 조카를 구하면 1/8의 확률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고,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결국 협동이란 유전자의 뜻이라고 설파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주 친한 친구라도 촌수는 무한대이다. 그래도 외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반갑고 동향이라고 서로 돕는 건 혈연선택의 위력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른다.

둘째는 ‘직접 상호성’(direct reciprocity)이다. 이 얘기는 단골을 떠 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언제든지 또 만날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무임승차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얘기다. 위에서 나온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¹ Nowak,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007, V314, 더 대중적인 책으로는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을 보면 된다.

무한 반복하는 경우 협동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간단히 증명할 수 있다. 트리버스라는 유명한 생물학자는 이런 관계를 ‘상호적 이타성’이라고 불렀고 결국 이기적 행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TFT)이다. 처음 게임에는 협력으로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전회에 상대방이 한 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실증됐다. 이 답은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해법이다.

셋째는 ‘간접 상호성’(indirect reciprocity)이다. ‘직접상호성’(direct reciprocity)은 반복해서 만나는 경우가 드물수록,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협력을 설명하기에 제한적이다. 만일 항상 남을 돕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도움을 주고 싶을 것이다. 또 어떤 이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협동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간접 상호성이 협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가 정확히 알려져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규칙은 ‘네트워크 상호성’(network reciprocity)이다. 언제나 협동하는 사람과 배반하려는 사람이 골고루 섞여있는 사회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한다면 무조건 배반자가 이긴다. 그러나 현실의 공간 구조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정상이다. 만일 협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다면 이들은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살아남고 그 클러스터의 힘을 바탕으로 무임승차자들의 영역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 몇 가지 가정을 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 네트워크 상호성은 일반적인 산업 클러스터 이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려 한다면, 귀농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형성된 공동체에 들어간다든가, 몇 명이 같이 움직인다든가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집단 선택’이다. 만일 협동하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

다면 이 집단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것이다. 위의 예로 본다면 협동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3을 얻을 것이고 이기적 집단은 모두 2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예를 들자면 희생정신이 강한 투사들이 모인 스파르타가 협동 집단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차원의 선택이 일어난다. 집단 내 선택(개인 간 경쟁)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유리하지만 집단 간 경쟁에서는 협동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다. 예컨대 어떤 군에서 협동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군은 탁월한 성과를 보일 것이고 다른 군이 따라 할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피가 많이 섞일수록,(싸이클롭이나 블로그의 촌수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이 높을수록,(게임이 반복될 확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잘 알려져 있을수록,(만날 사람이 협력자인지 무임승차자인지 잘 알 수 있을수록) 그리고 협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면 그 사회 전체에서 협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잘 갖춘 사회에서는 이제 협동이 사회규범(social norm)이 되고, 협동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을 갖게 된다. 협동하는 사회에서는 상호적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협동하는 사람에게 협동하고, 사회규범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거나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상호성이다.(위의 예에서 TFT 전략이 상호적 인간의 전략이다.) 상호성이란 사실 칸트의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나, 맹자의 측은지심(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수오지심(규범 위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표현이니 오랜 인류의 지혜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협동할 것이라고 믿는 신뢰(trust)의 사회에서 협동은 애써 노력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한편 신뢰라는 사회자본은 쌓아 올리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협동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하나 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집단 정체성은 흔히 외부에 대한 폐쇄성과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협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감베타라는 사회학자는 마피아나 거리의 갱단도 협동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협동하는 집단은 외부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내부의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기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잠김(lock-in)현상이 발생하면 그 집단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반사회적일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원리가 없는 집단, 특정 가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예컨대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미 눈치 채 독자도 있겠지만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은 이런 다섯 가지 규칙을 내면화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 최근의 진화생물학이나 행동경제학을 숙지한 결과는 물론 아니겠지만 ‘협동이 살 길’이라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집단의 행동규범으로 만든 것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다.

공동소유와 공동이용은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지혜이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식량을 공유해 왔는데 그것은 구성원 모두 사냥에 실패했을 때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었다. 또 하던의 단연과 달리 인류는 오랫동안 ‘공유지의 비극’을 맞지 않았는데 그 원리 역시 공동체의 공동소유와 이용의 상호적 사회규범이었다.

민주적 운영, 교육 및 홍보는 집단 내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상호신뢰를 촉진시킨다.(간접 상호성의 제고) 자치와 자율은 행동원리와 규범이 다른 정부 및 시장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미 존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인간협동의 다섯 가지 규칙에 비춰 더욱 구체화해서 발전 전략 수립에 응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간 협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협동조합 발전의 조건이기도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자.

협동조합은 왜 희귀한가?

제일 앞에서 인용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 그리고 마르크스, 심지어 한계혁명
의 창시자인 왈라스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협동조합을 예찬한 것은 이들이
협동조합의 장점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일 뿐 아니라 잘
운영되는 경우 효율성마저 높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왜 현실에서는 희귀한
것일까? 한국의 경우 생협이 겨우 1~2%의 비중을 차지하니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일이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1980년대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꽤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는
데 이를 요약해보자.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는 경제학에서 투자자
가 기업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
다. 바꿔 말하면 투자자가 노동을 고용하느냐, 노동자가 투자자를 고용하느
냐의 문제이다.

우선 자본 동원의 면에서 자본주의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유한 책임의 소
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시장에서 인정만 받
으면(또는 단순히 거품이 생긴다 해도)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비(up front fee)와 비분리 유보(Indivisible Reserve)라는 제약
속에서만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해당하는 회원권(membership,
조합원권) 시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통적 협동조합의 경우 회원권의 구
매란 그가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쉽게 매
매가 일어날 수 없다.

금융기관이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은행이 협
동조합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적절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협동조합이 고도로 특화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담보로 잡기 어려울 것
이다. 또 은행이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비민주적 기업을 선호하거나, (긴
티스) 또한 민주적 결정 원칙을 지키면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무의결
권 우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도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한다.(푸터만) 자본 동원이 힘들다는 것은 기술혁신에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1주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최대 주주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구성이 이질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한스만, 크레머)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평균적 노동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 할 것이므로 고능력자는 노동조합을 기피할 것이다.(크레머)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자본과 노동의 동원 양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협동조합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면 협동조합은 크게 성장해 왔다.

자본주의 기업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제도가 지배적 범주에 맞추어 구성되므로 협동조합이 점점 불리해지는 경로의존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평가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대출 기피나 불신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그러하다.

한편 협동조합은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자본 동원의 경우 협동조합은 신규 가입자가 상당한 액수의 입회비를 내고 비분리자산을 일정한 규모로 축적함으로써(몬드라곤의 경우 이윤의 30%를 재투자) 문제를 해결해 왔다. 또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특히 불황기에는 노동자가 선호하는 직장이 될 수 있다.(나바라, 크레이그와 펜카벨) 비분리자산은 경기변동에 대해서 일종의 자동 안정장치 역할을 하며 이것이 노동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율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을 선택할 것이다.(자마니)

주주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앨키앤과 뎀제츠의 주장과

달리 협동조합의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동료 간의 상호감시가 더 효율적이며, (푸터만) 노동자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commitment)와 신뢰가 존재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적은 감시자와 이윤 공유로 높은 생산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크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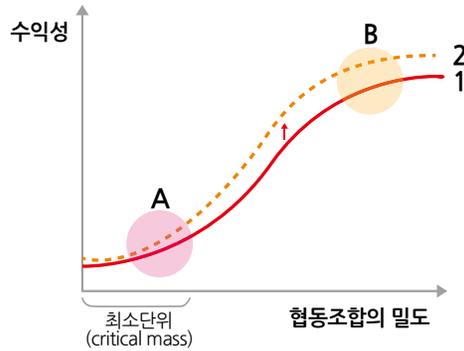
그러나 대규모 자본의 동원과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고급 노동력 유치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는, 노동의 양도 불가능성에서 직접 비롯되므로 하나의 기업 단위에서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협동조합의 네트워크화와 새로운 협동조합 형태의 발생이다.

네트워크화와 새로운 협동조합 형태

이제 협동조합의 협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이탈리아의 라 레가로 대표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실리콘 밸리와 같이 성공한 클러스터의 여러 요소들을 거의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인구 450만 명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은 라 레가와 함께, 400만 명에서 900만 명 규모의 북유럽 복지국가가 하는 역할을 지방 차원에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수행한다. 협동조합 중 하나가 문을 닫아야 한다면 노동자들은 네트워크의 재교육기관을 거쳐 다른 협동조합에 취직할 수 있다.

스미스는 네트워크의 존재를 협동조합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협동조합 생태계는 저밀도 균형(A)과 고밀도 균형(B)의 복수균형을 가질 수 있는데, 네트워크는 외부성을 내부화함으로써 고밀도 균형을 가져오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첫째 협동조합이 최소단위(critical mass, A)를 넘어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S자 형태로 체증하며, 둘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원기관(특히 교육과 사업서비스)이 생기면 수익성 곡선 자체가 상향 이동하므로(곡선1 → 곡선2) 수익성은 더욱 증가한다.(<그림1>²⁾

² Smith, S.(2001), Blooming together or Wilting Alone? Network Externalities and Mondragon and La Lega Co-operative Networks, Discussion Paper N27. WIDER.



<그림1> 협동조합의 밀도와 수익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협동조합이 네트워크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며, 네트워크는 자본 동원이나 대출의 어려움 등 협동조합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탈리아의 레가는 산하 협동조합 이윤의 4%를 적립함으로써 개별 협동조합 능력의 한계를 넘는 돌파혁신(break-through innovation)도 수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강조하고 교육과 훈련을 원칙으로 삼은 것도 네트워크화의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네트워크 내에 가치의 공유에 따른 신뢰가 쌓이고 조합원으로서 만족도가 증가한다면 고급 노동력의 충원도 가능하다. 네트워크는 경제학이 추론하는 협동조합 고유의 약점을 대부분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은 캐나다 등에서 전통적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표 2> 전통적 협동조합과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전통적 협동조합	신시대 협동조합(New Generation Co-ops)	후원자투자 협동조합(Patron Investment Co-ops)	노동자소유 협동조합
조합원 (소유)	개방적 조합원제. 일반적으로 이용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 후원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폐쇄적 조합원제. 소유권이 이용에 관한 계약(상품인도 계약)에 연계되어 있음. 후원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개방적, 또는 폐쇄적 조합원제. 비후원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	폐쇄적 조합원제. 조합의 노동자만 조합원 자격
지분	조합원 소유 또는 후원자의(액면가) 지분 공동 소유. 비후원자에 대한(무의결)우선주 부여 가능	공동지분. 그러나 조합원 지분은 '시장가치'를 지니며 조합원은 조합을 떠날 때 다른 후원자에게 지분을 팔 수 있음	후원자와 투자자라는 두 종류 회원의 공동소유	조합원 소유 또는 공동 소유. 조합원의 지분은 최저 기준시간 이상 노동해야 부여
투자위험	일반적으로 낮은 가입비(upfront investment).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위험	일반적으로 높은 가입비. 조합원들의 점증하는 금융위험	낮거나 높은 가입비. 흔해진 금융위험	낮거나 높은 가입비. 흔해진 금융위험

(출처: Zeuli, K. & Radel, J.(2005), Cooperatives as a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y: Linking Theory and Practice, The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 Policy, V35에서.)

PIC이나 NGC, 그리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캐나다 퀘벡 지역의 연대협동조합)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어서 협동조합의 발전에 더 유용한 모델일 수 있다. 또한 NGC는 회원권 시장을 일부 도입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투자가 아닌 사적 투자를 주된 목표로 한다면 공동체 내에 새로운 양극화를 야기해서 사회자본의 축적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으며 이질적 구성이 증가하므로 의사결정의 문제나 내부 차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협동조합의 타락’(degeneration)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비판은 현재 한국 상황

에서는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지만 사적 투자가 협동조합의 대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협동조합의 원칙에 기준한 민주적 결정만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문제들이 예견된다 해도 대형 협동조합은 네트워크의 핵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의 요소들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몬드라곤이나 레가처럼 필요한 기업의 인수, 합병이나 분사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은 공동체와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기금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데 우선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과 공동체³

협동조합 원칙의 또 다른 한 가지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 생존의 필수요건이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없는 협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1980년대 이래의 세계화와 기술혁신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공동체는 집중적인 타격을 받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EU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발전 전략이 모색되었다. 여기서는 협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의식적으로 공동체 발전의 일환으로 사회경제를 발전시킨 캐나다 퀘벡지역, 그리고 이후 퀘벡을 모델로 한 캐나다 각지의 경험이 한국에 더 유용할 것이다. 캐나다의 각 지역은 볼로냐대학의 협동조합 과정에 매년 활동가들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성공한 협동조합 모델을 이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의 실험은 공동체경제발전운동(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Movement, 이하 CED)과 사회경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경제란 전통적 협동조합을 필두로 1980년대 이후 새롭게 생겨난 사회적 기업

³ 전통적 공동체는 물론 봉건성을 떨 수 있다. 공유자원의 관리에 효율적인 많은 공동체에서도 이런 측면은 종종 발견된다. 집단은 언제나 기존 질서에 잠겨 폐쇄성과 정체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강조했듯 개방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섀넬이나, 협동조합 이론과 밀접한 에찌오니는 공동체주의자(communitarian)로 분류되는데 이 때 쓰인 공동체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와는 다름이 분명하다.

등을 포괄하는 범주이다. CED의 다양한 조직들,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 사회경제 조직들이 캐나다의 지역공동체를 움직이고 있다.

CED는 개념 자체가 공동체 참여라는 전략을 표현하는 동시에 경제와 정치/사회를 구분하는 기존 발전 전략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와 친화적이다.⁴ 한편 퀘벡지역은 1999년 정부가 포함된 ‘사회경제위원회’(Chantier de leconomie sociale)라는 사회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지방정부와 사회경제의 연합체가 체계적으로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CED와 사회경제의 결합은 결코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수많은 작은 실험들이 복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년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3>에서 왼쪽 유형은 공동체 수준에서 재현되는 과거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한국 지자체들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다. 가운데 유형은 사회투자국가론이 제시한 개인의 자산/능력형성 전략과 맞닿아 있는 패러다임으로 한국에도 소개됐고 서울에서 일부 시행중이다. 오른쪽 유형은 현재 캐나다가 도달한 사회경제와 공동체 중심의 발전 전략이다. 물론 현재의 CED에서는 세 유형의 발전 전략이 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처럼 사회경제의 형성이 미흡한 곳에서 세 번째 유형을 전격 실행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발전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을 내부에서 찾아내 공동체성원의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원칙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⁴ Laville et.al.2005.

<표 3> CED의 세 가지 발전 패러다임

발전 과정		
외생적 <		> 내생적
경제시스템의 개혁에 초점 (Ⅰ유형)	개인의 경제적 능력 계발에 초점 (Ⅱ유형)	그룹의 경제적 능력계발에 초점 (Ⅲ유형)
CED는 경제성장의 수단	CED는 가난한 사람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율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	CED는 개인과 집단이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원을 통제 하도록 만드는 수단
공동체는 명확하게 행정구역으로 정의됨	공동체는 인구학적 차원을 포함하는 경향-누가 경제적으로 주변화했는가에 초점을 맞춤	공동체는 스스로 정의됨 -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자원의 사유화 금융시스템 개혁 외부 투자 유치	확장된 서비스(extension service)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업가정신의 개발	공동체에 기초한 자원관리 마을 은행, 신용조합, 저축신용 협동조합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출처: Mathie, A. & Cunningham, G. (2002) From Clients to Citizens: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Occasional Paper Series, N4.)

결국 사회경제와 공동체발전전략의 결합이란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의 구성 요소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사회경제가 그 중심에 있다.

여기서 공동체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에서도 각 공동체와 구성요소들은 크고 작은 기금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본 기금을 형성하거나 매칭펀드를 부여하고, 또는 세제나 금융을 이용하여 공동체 자산 형성을 돕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의 노조 연대기금, 1억 달러 규모의 인내자본형성기금(patient capital fund), 공동체 대출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체의 자산 축적을 자본 증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럽 전체의 현상이다. 이렇게 공동체와 협동조합이 결합함으로써 자본 동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합

사업에 필요하다면 앞에서 본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역 재투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조합 등 사회경제를 대상으로 한 전문 대출 기관이 발전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경제는 지역재투자법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동체와 협동조합의 연합 발전 전략에서 생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에는 로컬 푸드 운동과 지역 음식점, 소비자협동조합이 연계되어 있다. 퀘벡지역의 식품/에너지 협동조합, 시카고의 협동조합 시장, 디트로이트의 카스 코리도 협동조합 등은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매상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저소득 계층의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고 값싼 제품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자 역할도 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위기 때 종종 최종 구매자 역할을 하여 지역의 농업과 영세 제조업자들을 살려내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공동체 정신이 발현된 것일 뿐 아니라 이들의 장기적 생존이 공동체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첨언

나는 협동조합 운동가도, 또 오랜 기간 동안 협동조합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협동조합 내부의 논쟁(이 자체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때론 무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거의 순수하게 경제이론에서 도출된 협동조합의 문제와 해법은 현실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1. 들어가며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토지에 묶여 대대로 살아오던 인류의 공동체적 삶이 무너지고, 토지에서 쫓겨나(인클로저운동)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는 이들이 대다수인 삶의 형태로 바뀌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농지에서 쫓겨난 개인들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언제나 자본에 고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는 이중의 자유, 즉 “굶어죽을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고 했다. 영주에게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했던 농노들이 토지로부터 이탈되어 개인적 자유는 얻은 반면, 자신의 경제적 삶을 영위할 아무런 생산수단을 갖지 못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의 몸을 팔아서만 노임을 받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으로 인류의 삶의 형태는 도시에서의 ‘개인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간다. 도시에서의 개인적 삶은, 개인이 중시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삶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삶의 형태를 자본주의적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에 전통적인 신뢰는 깨지게 된다. 물론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그 안에서 신뢰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 간에 형성되는 신뢰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의 기본적 신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새로운 조건 하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신뢰가 형성되게 된다.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경제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거기서 생산된 상품을 노동자가 소비함으로써 운영되는 체제이다. 여기서는 몇 단계에서 신뢰가 중요해진다.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일한 대가를 주고, 반대로 노동자는 자본가가 요구하는 노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품질과 양 등에 대한 신뢰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자본주의적 운영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 시스템의 운영도 그에 걸맞은 다양한 신뢰를 요구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경제적 (거래)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가령 노동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자본가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어음을 발행해 놓고 결국 그 어음을 부도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그 외에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상대방부터 많은 부당이득을 보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기본적으로 구조적 원인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신뢰를 요구하는 사회로 고착되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불신부터 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상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상적인 관계를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대 사회가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상화된 불안

(불신)을 줄이고 신뢰를 창조하기 위해 경찰제도와 사법제도를 둔다.

이렇게 개인들의 삶이 불안하게 됨에 따라 대책을 고민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신의 불안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협동하여 스스로 생산수단을 갖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구성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와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를 유지(제공)하는-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뢰의 형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신뢰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운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정리하고, 아이쿱생협에는 신뢰를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신뢰에 대해¹

1) 특정한 신뢰와 보편적 신뢰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 경제가 운영된다. 즉 사회 전체적인 운영구조가 자본의 방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정한 영역에서는 비자본주의적 방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종교적 영역이나 가정 등의 소규모 공동체가 그것이다. 이러한 비자본주의적 영역은 아직도 그 자체로 신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별도의 신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신뢰가 특정한 신뢰(particularised trust)이다.

¹ Uslaner, Eric M.(2008), TRUST AS A MORAL VALUE,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NY, pp.101-121 참고

특정한 신뢰를 추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릭 어슬라이너(미국 매릴랜드대 교수)에 따르면, 특정한 신뢰는 미래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능력이 비관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작은 지원네트워크와 연결됨) 고독한 사람들, 낮은 교육, 종교적 원리주의자, 부모와 따뜻한 관계를 갖지 못한 젊은 사람,(그들의 부모는 보편적 신뢰를 갖지 않고 타인을 믿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 소수민족에 속한 사람들이다.

반면 자기와 다른 사람, 즉 가족이나 교우가 아닌 사람에 대한 신뢰는 보편적 신뢰(**generalized trust**)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예로는 비종교적인 자원봉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보편적 신뢰의 기원은, 미시적으로는 교육,(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 소속감, 가족 환경,(인생에서의 조기 체험) 낙관주의와 컨트롤(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는 제어능력)이고, 거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평등이다. 그밖에 문화적 전통, 전쟁과 평화의 역사적 경험 등이 있다.

국가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부의 형태(정치제도)보다는 정책이 더 크다.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즉 공정한 소득분배는 사회의 부를 함께 나눈다는 낙관주의를 형성하고, 또한 사회의 다른 집단과 연대를 강화하여 보편적 신뢰를 강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게 어슬라이너의 주장이다.

2) 도덕적 신뢰와 전략적 신뢰

도덕적 신뢰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는 도덕적 율법에서 온다. 이것의 기본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신조’이다. 인간은 서로 신뢰해야 하고 그것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전략적 신뢰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기대를 믿을 수 있을 때 신뢰하는 것이다. 즉 “A는 B가 X를 해주기 때문에 (B를) 믿는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신뢰가 요구된다. 상대로부터 믿을 수 있는 꺼리(X)를 확인한 뒤에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자

본주의 사회의 모든 상거래는 이와 같이 상대의 신뢰(신용)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만이 거래가 성사된다(신뢰한다). 이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요구하는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요구 내용이 자신이 생각한 요구와 다를 때 거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략적 신뢰는 바로 깨지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신뢰를 높여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신뢰에는 필연적으로 힘의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램이 상호간에 다르더라도(불평등)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다. 이는 곧 힘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 신뢰는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협동조합은 특수적 신뢰(결속력)를 높여가면서 동시에 보편적 신뢰를 추구한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주체(개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전략적 신뢰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쁜 경험에 의해 전략적 신뢰를 잃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진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은 자구책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를 막아주는 그런 조직 속에서 '특정한 신뢰'를 구성하고 강화해간다. 이때의 신뢰는 구성원간의 직접적 신뢰보다는 자신이 참여하여 만든 조직을 통한 신뢰이다. 즉, 자신이 참여하여 구성한 협동조합과 자신과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구성원과의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다.²

협동조합은 이러한 특정한 신뢰 강화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 신뢰를 높여가야 하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태생적 특성에서 오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탄생했기에, 전략적 신뢰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협동조합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끔

² 협동조합에서 나타나는 신뢰는 어슬라이너가 분류하는 특정한 신뢰와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전략적 신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초기에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향이 높기에 특정한 신뢰를 협동조합의 내적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로 바라볼 수 있겠다.

임없이 보편적 신뢰를 강화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운동의 결과물이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지역사회와 미래의 구성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

즉, 협동조합은 내부적으로는 특정한 신뢰를 높여 협동의 효과(결속력)를 극대화하고, 구성원은 이를 통해 특정한 신뢰를 넘어 보편적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교육 효과와 집단적 기억, 그리고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낙관주의와 컨트롤을 갖게 된다. 이는 곧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보편적 신뢰를 강화하는 과정이다.

3. 협동조합과 신뢰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합해 만든 조직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사업체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하게 된다.

여기서 신뢰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주체)이 자신의 문제(욕구와 바람)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기에,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자본(가)의 이윤추구라는 목적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어떤 점에서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협동조합은 그 태생부터 성격이 다르기에 운영되는 원리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은 그 본성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뢰(신용)를 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반대로 구성원의 요구와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뢰를 생산하고 대내외적으로 그 신뢰를 제공하게 된

다. 협동조합은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구성원의 요구를 해결해 갈 수 없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성 때문에 협동조합은 가치와 원칙을 세워 끊임없이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 협동조합의 가치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라는 가치를 기초로 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 창설자들의 전통 속에서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보면, 조직 운영 측면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항목으로 ‘공정’과 ‘평등’이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참가할 권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 즉, 조합원은 조직에서 가능한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은 협동조합에(경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각종 배당이나 요금 인하 등의 형태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신뢰를 얻게 된다. 협동조합은 상품의 양과 질, 가격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는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인 공정선구자협동조합에서 상품의 품질과 양을 속이는 당시의 관행을 바꾸면서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그러한 신뢰가 지역의 상인자본들의 방해로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조합을 구한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과 일반 사람들, 정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직운영이나 사업에서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불신을 신뢰로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협동조합은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이면서 행동과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³ 원칙은 협동조합

³ 자발적이며 개방된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등 앞의 세 가지 원칙은 어떤 협동조합에도 해당하는 내적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며, 자치와 자립,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 등 후한 네 가지 원칙은 협동조합의 내적 활동과 외부 세계와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을 활성화하는 골격이며 협동조합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힘이다. 골격과 힘을 통해 협동조합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그 본성상 조합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존속할 수가 없으며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협동조합 역사를 보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로 큰 타격을 입은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는 반대로 협동조합의 본성이 신뢰를 적극적으로 생산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4. 협동조합에서 신뢰를 무너뜨린 몇 가지 사례

한국의 생협은 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편리하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협에 가입한 조합원의 기본 요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2003년과 2004년에 생협의 생산지에서 혼입(규정에 어긋난 물품이 섞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생산지의 잘못이지만 조합원들에게는 모두 생협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당연히 생협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은 생협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생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없다면 생협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생협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고의 처리에서 또 한번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더 심각한 불신을 낳게 된다.

당시 처리를 보면, 해당 생산지에 대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고, 의도성이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생산자에 대해 정확히 대응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운 곳과, 그러지 못한 채 거래를 계속 유지한 곳으로 나뉘었다. 그 이후 7,8년이 지난 지금 당시 어떤 대응이 옳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그러한 사고를 조합원에게 정확히 공개하여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곳과 공개하지 않는 곳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다. 더욱 문제인 것은 생산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일지라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곧 생협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생협의 신뢰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산지에서 약속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 역시 신뢰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하다. 흔히 어떤 산지에서 표시위반, 혼입, 위생상의 미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비난하고 규탄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만 그친다면 신뢰를 깨트린 채 재구축하지 못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협동조합은 신뢰가 깨졌을 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이해관계자를 최소화하면서 신뢰의 재구축을 위한 과정에 집요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로 2008년 1월에 발생한 일본생협의 중국산 만두 사건을 들 수 있다.⁴ 일본생협의 전국조직인 일본생협연합회(JCCU)가 단가 문제로 중국의 식품공장에서 OEM으로 제조한 만두를 수입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치바현에서 7명, 효고현에서 3명이 복통을 일으켜 일본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은 중국 제조회사의 잘못으로 거의 밝혀져 일본 사회는 그나마 안도했지만, 근본적으로 식품 테러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의 과제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피해조합원이 발생한 치바생협에 조합원 확대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기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프데일리(가정공급사업) 택배사업의 이용률 저하를 몰고 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사고 이후에 조합원의 신뢰도는 현저히 떨어졌고(아주 만족 34%→10%로 하락), 조합원 확대 활동을 재개한 직원에게 시민이 물벼락을 준 일도 있을 정도로 생협에 대한 지역사회

4 (財)生協總合研究所, 「生活協同組合研究」, 2009.4.(399호), 57~64쪽.

의 신뢰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일반 시민의 감정과 분위기는 다시 조합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생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 만들기에 공헌한다”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생협의 가치가 크게 신뢰를 잃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치바생협이 얻은 교훈은 첫째, 조합원이나 소비자, 사회가 볼 때 ‘생협은 하나’라는 것이다. 생산을 누가 하든, 구매를 누가 하든, 점검관리를 누가 하든, 어느 생협에서 사고가 났든 모두 생협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품 점검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조합원과 대면하는 직원이 조합원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가가는 행동이 조합원을 안심시킨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들이 조합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치바생협이 얻은 이러한 교훈은 철저히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태도 속에서 얻어진 것이며,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태도를 조합원에게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생협의 태도는 조합원과 사회의 신뢰 저하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신뢰를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

반면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숨기다가 나중에 드러나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있다. 일본 삿포로 지역의 3개 생협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와 장기 불황이라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다. 1995년 홋카이도 구시로시민생협(연간공급액 186억 엔, 조합원 5만 5천 명)은 일본생협연합회에 긴급 지원요청을 하였는데, 누적 적자 67억 엔에, 7년 동안 누적결손을 분식결산 해왔으며, 이사회에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 구시로시민생협의 경영파산은 매스컴에 보도되어 도내 조합원과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결과 자금이 동결되고 조합원과 합의가 추진되었다. 1996년 3월 화의를 신청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출자금에 대해 80% 삭감을 결정하였다. 생협의 경영이 곤란을 겪게 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몇 년 동안 분식회계를 통해 숨겨왔던 것인데, 결국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 동안 협동조합이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서 연합회의 지원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파산에 이른다.

국내 협동조합에도 언론에 무수히 오르내린 사례가 있다. 특히 부정이 일상화 되다시피 한 농협중앙회는 최근 몇 년간 언론에 드러난 부정사건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불법대출과 리베이트 수수, 자산매각 대금 할인 후 리베이트 수수, 직원들의 공금횡령, 농산물 브랜드를 속여 팔거나 정체모를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팔기 등 다양한 부정을 일삼는 조직으로 국민들의 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물론 농협이 농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만든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낮은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로 인해 진정 농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해 늘 농민과 국민들에게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협동조합이 스스로 경계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협동조합도 언제든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마무리 : iCOOP생협의 신뢰 정책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성공적인 대안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결정과 판단의 지침이 되는 협동조합 7대 원칙의 정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이쿱생협은 14년 동안 생협을 발전시켜 오면서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그리고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았다.

협동조합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이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초기에 어렵게 유지되던 지역생협의 사업(매장과 공급)을 연합조직으로 집중해 비교적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조직 활동 중심으로

방향을 변화시켰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조합원 활동가 층이 세워지도록 하는 정책(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을 기본으로, 조합원 조직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해외견학 등을 추진해왔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협동조합은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합원이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과 훈련의 강화 등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조합원과 지역사회로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안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협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품을 조합원이 정한 취급 기준에 의해 조합원 자신이 취급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자칫 전문가(실무자)에게 이끌려가기 쉬운 협동조합 운영에, 선출된 조합원 활동가들이 주요 정책과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는 결국 조합원 활동가에게는 판단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에게는 집행권을 주어 권한과 집행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 구조를 튼튼히 하면서 일상적으로 조합원이 생협의 운영에 참여(경제적 참가 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조합원이 생협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조합원을 주인으로 튼튼히 내세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공개의 원칙: 모든 물품 사고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

지금까지 아이쿱에서는 모든 안전사고를 공개하였으며, 특히 2003년 수입산 기장 혼입사고, 2004년 수입밀과 팥 혼입사고를 거치면서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지금까지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

- 교육 강화: 다양한 조합원 활동가 층별로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기타 사회적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합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조합 차원에서 조합원을 위한 식품안전 및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나

인문학 강좌 등을 하고 있으며, 마을모임, 각종 위원회, 이사회 차원의 협동조합과 다양한 교양강좌와, 연합회 차원에서 이사코스, 경영코스 등 고급 코스를 마련하고 있다. 해마다 2회 정도 활동가의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의 협동조합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협동조합인들과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다. 많은 활동일정에도 조합원 활동가들 대부분은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정체성을 높여가고 있다.

-물품의 신뢰 시스템 강화: 우리 농업의 열악한 조건에서 언제라도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급기준에 맞는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의 사고 경험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면서 ‘유통인증협회’를 만들어 상시 관리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고 경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그동안 상호 신뢰 차원에서 ‘관리’하던 수준에서 전문적인 관리책임 기관을 두어 인증과 일상적 점검을 강화하는 체계를 세운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공인검사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울 예정이다. 이러한 신뢰 시스템은 결국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신뢰는 생명선이다. 잘려나간 고목에서도 뿌리가 살아있다면 새순이 돋아나듯이” 

왜 협동조합은 규모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머리말

최근 들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 당 조합원 수와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 규모와 협동조합의 정체성 혹은 ‘경영’과 ‘운동’사이의 상호 갈등을 토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협동조합이 기업적(enterprise) 측면과 결사체적(association) 측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은 협동조합의 기업적 측면을 통하여 달성된다. 그러므로 사업 규모는 협동조합의 기업적 측면과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기업이 성장을 통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규모의 확대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물인가? 협동조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규모의 확대 없이도 지속가능한가?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은 규모 확대의 본질과 협동조합에서 규모 확대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협동조합이 자신의 취급 규모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규모의 확대가 협동조합방식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무엇이 다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형태의 기업과는 다른 운영 원리와 기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이러한 차이가 규모의 확대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협동조합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처 방식이 주식회사의 경우와 다

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규모 확대에 대처하는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협동조합의 경제적 효율성과 규모문제

기업의 성장은 제품 및 서비스 생산량 혹은 취급량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취급 품목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수직적 공급 체인의 전방 혹은 후방의 취급 단계로 진출을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 첫 번째 경우를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 규모의 확대라고 하고, 두 번째 경우는 범위의 확대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칭한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은 대부분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 규모가 확대된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규모를 확대할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업의 규모 확대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생산량의 확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모든 소유 형태의 기업은 토지, 설비, 기계, 노동, 원료라는 투입 요소를 기술과 경영이라는 노하우를 통해 결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한다. 그런데 토지, 설비, 기계 등에 투자된 비용은 생산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제품 취급 단위당 고정 비용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정 비용이 각 제품에 분산되는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분업 및 전문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 및 전문화의 이익은 노동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불가피한 조정비용(costs of coordination)과 상충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동 투입량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은 일정 규모까지 증가한 후에 다시 감소한다. 그리하여 제품 한 단위당 소요되는 총비용은 생산량 혹은 취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고 일정한 규모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증가한

다. 그러므로 기업은 평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에서 생산량 혹은 취급량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소 효율 규모'에서 생산량 혹은 취급량을 결정하지 않으면 시장 경쟁에 처해 있는 기업들은 경쟁 기업에 비해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최소 효율 규모는 과학 기술 및 경영 관리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 식품유통산업을 예를 들면 지난 60년 동안 바이오 기술의 발달, 운송, 정보 및 통신 수단의 발달, 냉장 저장 기술의 발달, 경영 관리 기술의 발달 등으로 식품의 제조, 도매, 소매 기업의 취급 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었다. 소매 유통체인인 후발 기업인 월마트는 이렇게 발달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만 100만 명의 종업원을 보유하는 1위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요구되는 규모 확대를 피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동조합이 시장 경제에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다. 만약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요구되는 최소효율규모의 확대를 외면하게 되면 협동조합은 경쟁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 비해 동일한 제품을 높은 가격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에서 발전해 온 세 가지 지배적인 종류의 협동조합들 즉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당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일본의 고베생협은 1990년도에 조합원 수 1백만 명이 넘었고, 2010년에는 140만 명에 달하였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은 19세기 말에 1,439개 조합들이 조합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조합 간의 합병을 통해 20세기 말에 40개 조합으로 대규모화되었다. 유럽의 대표적 협동조합은행인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꼴(농업신용협동조합)은 단위신협이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에서 합병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 현재 37개 조합으로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은 꾸준히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 유럽의 대표

적인 농협인 덴마크의 돼지도축·가공·판매협동조합은 1백여 개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 단 2개 조합으로 합병되었다. 이 중 데니쉬크라운은 전체 양돈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합원 1만2천여 명의 양돈농가와 9천여 명의 비육우농가 등 총 2만1천여 명에 달하고 직원은 2만3천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단위생협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조합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규모의 영세성을 해결하기 위한 합병의 실현 과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원 및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아직 면 단위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합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흥도 조합원 수나 자산 규모의 영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조합의 사업규모가 적절한 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조합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렵게 되고 전문화나 분업의 이익이 낮게 된다. 결과적으로 단위당 생산 혹은 취급비용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품질 또한 낮아지므로 조합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이 동일한 강도로 규모의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화의 추구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전략(business strategy)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보통 한 산업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통으로 취급하는 대체성 높은 제품 및 서비스는 비용 절감을 통해 공급 가격의 인하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화의 강도가 상당히 높게 요구된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은행들이 주식회사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대체성이 낮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저렴한 공급가격보다는 품질 혹은 기술 차원의 시장리더십을 추구하기 때문에 규모화 추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친환경농식품을 취급하는 우리나라의 생협 등은 초기에 일반 유통기업과는 차별화된 농식품을 취급하면서 발

전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산지와 거래방식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규모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적었다. 또한 특정한 소비자나 특성을 지닌 제품, 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즉, 초점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규모화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

환경적 관점에 철저하게 부합한 식품이나 윤리적 소비, 혹은 특정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취급만을 원칙으로 하는 기업이나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규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차별화 전략이나 초점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비용리더십 전략을 채택한 기업보다 우선 순위와 정도에서 차이는 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화는 여전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도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규모 확대에 따른 협동조합의 조직운영비용 문제

기업 규모의 확대는 바로 한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산의 확대로 나타난다. 한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가능할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순 매출액을 자랑하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그 규모가 포르투갈의 국민소득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기업 규모의 확대 이유와 가능성에 대한 천착은 협동조합방식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규모 확대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업이 설립되어 성장하는데 기업의 자산 규모는 필연적이고, 기업이 지속되는 한 그 자산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되는 자산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여 시장에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기업은 존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 자산의 확대가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해당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기업 자산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에만 경제적 효율성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자산관리능력의 한

계까지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소위 분업 및 전문화의 이익과 조정 비용의 크기는 기업의 자산관리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기업 간 규모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규모 확대 도모를 위한 자산관리능력 향상의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끊임없이 혁신해왔다. 기업 내 전략경영 단위와 일상적 업무단위의 분리, 의사결정 권한의 적정한 배분, 직원 성과평가체제 및 인센티브제도의 혁신 등이 바로 기업의 자산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신의 자산소유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다른 기업과 거래방식 혁신을 통해 분업 및 전문화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추구해왔다.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 방식의 도입, 프랜차이즈 방식의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자산소유규모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조정비용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자산관리능력 면에서 주식회사형태와 협동조합형태 간에 차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회사형태와 협동조합형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을 관리하는 기제가 현저히 다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를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 경영자대리인문제, 조합원 참여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짚어보자. 아주 단순화시켜 볼 때,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주주들의 투자가치 극대화에 있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사업 이용가치 극대화에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투자가치 극대화를 위한 목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주식회사의 사업내용과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주주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해당 기업에 반영되지 않거나 기대와 다를 때, 해당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면 쉽게 그 기업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식시장은 공개주

식회사의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반면 협동조합이 사업을 조직화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필요와 열망의 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업, 품목,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은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든 집단적인 의사 결정은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게 되고, 중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조합원들의 수가 증가 하면서 조합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와 선호하는 사업이 다르게 되면 조합의 의사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조합 내의 소모적 정치 행위가 커질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다른 조합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조합 내에 불만 세력으로 남아 있게 되거나, 소극적 조합원들의 경우 탈퇴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불만이 존재할 때 다양한 선호와 이해관계를 지닌 이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결정된 방안이 조합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으로 귀착될 수 있다.

조합규모의 확대가 조합원의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조합원의 이질성이 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보다 생산자협동조합인 농협이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신협이나 생협의 조합원들보다 판매 및 가공농협이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조합원 소득이 조합과의 거래에서 받는 영향이 크고, 농협이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원료 공급 및 제조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질성 차원이 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협이나 생협의 단위 당 조합원 수가 판매 및 가공농협이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농협이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경우 조합 규모의 확대가 조합원의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영자 대리인 문제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본금이 확대되면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자가 다수로 분산되고 경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경영인 채용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전문경영인의 채용은 기업 통제권을 소유권자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문경영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전문경영인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여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위 대리인 비용 문제의 발생 또한 불가피하다.

그러나 분산된 주식소유 형태로 다수가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기업 소유자들이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영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공개주식회사제도와 금융시장은 이러한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제를 발전시켜왔다. 적대적 인수제도를 통한 경영자 왕국의 해체와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엄격한 회계기준, 공시제도, 내부자 거래 금지, 소액주주 권한 행사를 촉진시키는 각종 제도, 애널리스트의 기업평가 활동을 통한 경영자 감시활동 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식 및 비공식 제도가 발전해왔다.

또한 공개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이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만한 경영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 주식의 매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쉽게 처분할 수 있으며, 실질적 경영자 소유권에 의해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축소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의 가격 변동이 경영자의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톡옵션과 같이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소유자의 인센티브와 일치시킬 수 있는 보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반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자 대리인 비용문제에 대처한다. 조합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을 감시할 동기가 높고 조합 운영에 대한 참여가 높은 편이다. 또한 조합원은 정기적인 거래를 통하여 조합의 사업과 경영에 대한 암묵적 지식 획득이 용이하다. 특히 조합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조합 임원이 조합원의 관점을 경영진에 전달하고 경영진의

의사를 조합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경영진의 대리인 비용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특히 조합 설립 초창기에는 경영진과 조합원 출신 임원 및 조합원활동가 간의 강력한 연대의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영자 대리인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조합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창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까지 물러나게 되어 당초 조합원과 경영진 간의 강력한 연대의식은 크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된 조합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문경영인제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러한 경영인의 대리인 비용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러한 경영인의 대리인 비용을 축소할 기제가 상법에서 규정한 회계의 투명성 및 소수 조합원 권한의 행사 이외에 주식회사에 비해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영성과는 이윤의 극대화 혹은 주가를 통한 주주가치의 제고라는 기준을 통해 용이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경영인의 성과 측정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조합이용가치 극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영인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규모 확대에 의한 경영자 대리인 비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독할 수 있는 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지만, 조합원 수의 급격한 증대는 조합의 임원과 조합원과의 간격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조합 임원의 대리인 비용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1960년대 유럽의 대규모 소비자협동조합의 파산이나,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농협 파산 배후에는 조합 경영인과 임원의 대리인 비용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조합 규모의 확대를 도모할 때 경영인과 임원의 대리인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 규모의 확대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 사업 및 운영 참여 유인

이 저하되는 문제다. 조합 규모가 작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유대감이 높아 참여가 높은 편이지만 조합 규모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유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대감의 약화는 조합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조합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게 되면 조합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수행할 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임원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 있는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규모의 확대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공식적인 유인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협동조합의 규모화 전략: 맺음말을 대신하여

서술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비해 규모 확대에 따라 각종 조직 운영 비용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와는 다른 규모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첫째, 사업연합조직 전략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주로 이 전략을 채택해왔다. 1차 협동조합 수준에서 도매 및 소매기능, 전략적 경영 기능과 일상적 업무 수행 기능 사이의 분업 및 전문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1차 조합이 도매 및 전략적 경영 기능을 한 곳으로 위임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분업 및 전문화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부문에서 오래전부터 소유권이 서로 독립된 조합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사업연합 조직을 설립한 것은, 주식회사형태의 기업들이 합작투자를 시도한 것보다 선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의 발달, 시장경쟁의 격화는 이러한 사업연합조직의 전문기능을 보다 중요하게 만들어 왔고, 더 나아가 1차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을 점점 더 사업연합조직으로 위임하게 만들었으며, 1차 조합은 사업연합조직의 지점 혹은 점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왜소화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은행의 본점과 지점사이, 혹은 대형 슈퍼 체인의 본부와 점포사이의 관계와 큰 차이가 없게 되어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 방식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의 조직화는 1차적으로 조합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도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조합에서 파악된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에 대한 정보가 사업연합조직에 원활하게 전달될 때 주식회사 조직형태에 비해 협동조합 조직 혹은 사업의 장점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주식회사 대형 소매 체인의 점포 기능에 비해 1차 소협의 기능은 그 범위가 넓고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차 조합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규모 확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소협과 신협이 사업연합조직 전략을 채택한 경우에 사업연합조직과 회원조합 간의 기능 분담의 범위,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 정보의 흐름 및 소통 촉진을 위한 기제 구축, 사업연합조직의 회원조합에 대한 비용 부과 및 잉여 배분의 합리적 기준의 마련, 사업연합조직으로 권한 위임에 따른 사업연합조직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체제의 구축 등의 과제가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를 환경의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해결한 대표 사례로 노르웨이의 소협과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및 캐나다 퀘벡의 데잘댕 신협이 알려져 있다.

둘째, 판매 및 가공농협이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사업연합조직 전략을 채택하기보다는 주로 조합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해왔다. 즉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조직화하였고, 동일한 품목농협 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왔으며, 노동자생산협동조합도 노동자의 이질성을 높이는 방향의 사업 다각화를 자제해왔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범위의 경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품목을 동일한 농협에서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불가피해지면 독립회계제도를 실시하여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판매 및 가공농협이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 사업연합조직 전략보다 주로 자기완결적인 조직의 확대 전략을 채택한 것은, 사업연합전략의 채택으로 얻게 될 분업의 이익은 크지 않고 조합 간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협동조합은 규모의 확대에 따른 조합원의 참여도 저하 가능성,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 조직화활동의 소홀 가능성, 그리고 대규모 조합 및 거대 사업 연합 조직에서의 임원 및 경영자 대리인 비용의 증가 가능성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시스템으로 접근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조직체계는, 사업조직체계와 조합원조직체계를 분리하여 사업조직체계는 2단계화할지라도, 조합원 및 임원의 교육 및 의견 수렴, 전략 설정, 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합원조직체계는 3단계 체제를 고수하였다. 그 이유는 위의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규모 농협은 자회사화를 통해 사업 기능을 위임하고 조합은 조합원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연합조직의 대규모화에 따른 경영자 대리인 문제, 회원조합 간의 갈등문제, 사업연합조직과 조합원의 중앙조직과 관계 설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사례가 어느 정도 함의를 줄 수 있을지는 협동조합 실천가들의 창의적 조직 혁신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마루야마 시게키 (JC총합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시스템¹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 서론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일본 생협에서 조합원참여시스템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편집자의 의도는 “일본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한국 활동에도 참고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간단히 답하기는 어렵다. 솔직히 말해 일본 생협을 경영하는 전문 임원 및 간부 직원, 그리고 이사장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활동가리더, 일반 조합원 뿐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연구자들도 ‘조합원 참여’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조합원이 증가함에 따라 생협 조직과 기구가 복잡해지고, 기술 역시 전문화·고도화되어 왔다. 많은 비즈니스가 국제화되고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처럼 어떤 문제든 몇 시이건 상관없이 조합원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인식을 갖고 해결하는 일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어려워졌다. 또한 지식·정보·과제를 공유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시도하고, 실천해왔지만 딱히 “이것이야말로 해결 방법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명확한 성공 사례는 적었으며,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조합원 활동 참여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가 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본 주제를 시작해 보려한다.

생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활동적인 조합원 한 명이 200명, 아니 300명의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집, 한 집 가정을 방문하여 집회를 열고 “생협이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입

¹ 원문은 본고 다음에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시켰다. 생산자와 교류 활동, 위험한 농약 연구회, 세계 식량사정, 국내 유기농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많은 조합원이 참여했고 이용금액도 증가했는데, 지금은 참여자가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원을 맡고자 하는 조합원도 적어져 조직 운영 자체가 곤란해졌다.

생협의 슬로건은 '평화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이다. 하지만 생협의 리더들은 최근에 이 '평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조합원 가운데는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화 운동'이 진보적 정당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예전 일기기는 하나 "소련·사회주의 국가는 평화 세력이고 미국·자본주의 국가는 전쟁 세력이다-라고 공산당이 주장한다...그렇다면 생협은 신공산당이 아닌가?"라는 의문과 인상이 존재했다. 최근의 지도부는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평화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조직적으로 원수폭(原水爆)-핵무기반대 운동 이외의 평화 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조합원 중에는 '미군기지 반대', '평화헌법 옹호 운동', '원자력발전소 반대-반영구적으로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라! 탈원자력발전소!' 등의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나, 지도자는 이를 조직적 또는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지도부가 생협 경영을 중요시하며 정치적인 과제는 가능한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정을 방문하면 주부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누군가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생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집회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은 부재가정이 많고 가족구성원도 적어지고 있다. 여성들 대부분 낮 시간에 일을 하거나 취업 준비나 문화 강좌에 나간다. 예전처럼 집회와 대화의 기회가 적어졌다. 아이들은 적어지고 노인은 증가하여 가정의 식사량과 질도 변화하였다.

조합원 참여는 중요하고, 조합원의 참여가 협동조합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극히 일부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 대부분이 주인공이 아닌 '손님'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생협의 현실이다. 조합원은 생협의 운영과 경영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2. 변화된 사회경제,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생협

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일본 생협이 큰 성장을 거둔 시대와² 거품경제가 붕괴하고 정체되어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던 시대³, 글로벌라이제이션·신자유무역주의경제가 침투하여 비정규직노동자 등 ‘새로운 빈곤층’이 증가한 21세기 이후의 시대까지⁴ 큰 변화가 있었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는 워킹푸어(근로 빈곤층),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의 증대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노인이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더 큰 변화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경제계의 동향과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활동 강도에 따라 발전 방향은 변하겠지만 새로운 창조적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된다.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협동조합진영의 대응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분명한 것은 과거 약 40년 간,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정치·사회·경제에 큰 변화가 있었고 가족구성이나 라이프스타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생협 조합원의 요구와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 방식, 그리고 조직 자체도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변화한 시대에 필요한 대응·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과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였다.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 농협과 생협으로 조직된 일본협동조합의회(JCC), 세계협동

2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약 20년

3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 간

4 2000년 이후의 10년 간 즉, 2011년 현재

조합의 해 실행위원회, 협동조합학회 등 각 단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기획을 세워 실행하고자 논의를 개시하였다.

왜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을까? 이는 간단히 말해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지금, 정부는 복지와 환경문제,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는 비참한 상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이다. 한편 경제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업은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을 위해 물적·인적·기술적인 자원을 집중하면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회 공헌활동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높아져도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에 한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실업으로 생활이 곤란하며, 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준에 놓여 그 중 일부는 난민이 되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수생과 불법 입국자도 다수 있다. 일본의 농업과 어업, 중소기업 가운데는 적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아니고는 경영을 해나갈 수 없는 공장·수산물 공장·농장이 많이 존재한다. 경영자, 노동자 모두 외출타기 경영과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누가 대항할 것인가. 국가나 영리기업만으로는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협동조합'이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협동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농업, 소비, 신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라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목적과 역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과 맞물릴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협동조합이 나설 차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이다. 실제로 농협은 농민을 위한, 혹은 농협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한 조직, 생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협동조합진영이라고 하지만 생협과 농협, 신용금고는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모든 협동조합이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헌장’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또 어떤 사람은 1980년의 『서기2000년의 협동조합-레이들로 보고서』와 1995년의 『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성명』이 일본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검증하자고 제안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세계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2011년 일본 협동조합학회는 위와 같은 주제 설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배경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동일하나 법률적으로나 실제의 행태, 목적과 원리, 원칙을 달리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이념과 행동을 연대하게 하여 조합원 자신의 조직으로 새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2011년 봄, 2012년을 향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려 하고 있다.⁵

4. 동일본대지진과 원전피해로 정세가 뒤바뀌다

알다시피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쿄전력 제1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대사고로 제어능력을 잃고 폭발하여 방사능이 하늘과 바다로 유출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내용과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여기에서는 파괴된 생활과 생산을 협동조합이 어떻게 복구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선택과 논쟁, 분기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2012년 UN이 정한 세계협동조

⁵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합의 해의 주제 역시 ‘협동조합의 재생·부흥’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과 함께 조합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겠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일본 생협 진영이 아주 빠른 속도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특히 피해지역 중 하나인 미야기(宮城)현의 미야기생협은 전체 주민 세대의 69%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본 최고의 생협 조직 중 하나다. 지진 발생 후 전국 각지의 생협은 특히 긴급히 필요한 빵과 식수를 약 200대의 트럭으로 빠르게 운반하였다. 생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피난소와 피난민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모든 활동 거점에 구원 물자와 의사, 의료품,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였다. 이런 구원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효고현(兵庫縣) 고베시(神戸市)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고베대지진 후 많은 지자체와 생협은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서로 돕는 협정을 맺고 훈련도 함께 해왔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위로와 기부금이 도착하였다.⁶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해 발전소 주변 지역은 방사능오염의 위험이 커서 낙농업과 농협, 어업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에너지 공급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복구를 해야 할 것인가? 일본 정부는 간나오 토(菅直人)수상 아래 복구구상회의를 설치하여 6월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복구방침을 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침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언설·논쟁 중 두 가지 각기 다른 방향이 서로 대립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풀어보고자 한다.

5. 복구를 둘러싼 두 가지 방향 사이의 갈등

첫 번째 방향은 미야기현지사와 자민당 고이즈미(小泉) 내각의 각료였던 다케나가 헤이조(竹中平蔵) 등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제창하고 있는 방침

⁶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주제와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다. 이들은 이번 재해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의 항구·어협과 농장·농협을 통합하여 대규모화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한 어업·농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업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어업권을 개방하고 농업에 일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다.(이른바 ‘특구’) 또한 지방행정구역인 종래의 현(縣)을 통합하여 대규모의 도주(道州)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대자본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어업·농업을 만들어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고, 무역 확대를 위해 TPP⁷와 FTA를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투자하기 쉽도록 법인세를 삭감하고 국가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이 육성되고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어 고용 창출 기회도 많아진다고 본다. 따라서 젊은 세대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어업회사와 농업법인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원전이 위치한 현의 지사들은 “일본은 물자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구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지방분권 촉진, 지방자치 강화, 지역순환형 지역경제구축, 특히 협동조합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과 밀착하여 모든 주민·모든 조합원의 참여에 의한 ‘공생·공유·연대’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출하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도시 소비자와 연대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자는 것이다. 복구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참여를 기본으로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협동조합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논리적·사상적 배경은 아주 흥미로운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 4월15일 아사히신문 석간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어선 공유하기’, ‘자립·자생의 미야코시(岩手県宮古市) 오모에(重茂)어협’, ‘50척을 공동으로 이용’-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지진피해. 일치단결하여 극복하는

7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수밖에 없다.”

전북과 양식미역으로 알려진 이와테현 미야코시의 오모에어협(조합원 약 580명)은 5월9일 조합원전원협의회에 모인 약 400명에게 어선과 양식 시설의 ‘공동이용안’을 설명하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박수로 찬성하였다. 어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 814척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어부들의 소득이 전무하게 되는 위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낸 대책이 공동 이용안이었다. 주로 전북과 성계 잡이, 미역양식에 사용되는 작은 어선을 다함께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쓰나미에 바다로 휩쓸린 어선과 수리하면 사용 가능한 어선 등 약 50척을 조합이 모두 소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선은 4지구(地区)로 나누고 수익은 지구마다 나누어 가질 계획이다.

나아가 새로 구입한 어선은 모두 조합이 소유하며, 모두에게 한 척씩 돌아갈 수 있는 수량이 마련된 후 개인에게 인도된다. 새로운 어선 대금은 2013년도 이후의 양수대금에서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어선을 잃고 재출발하는 어부들은 빚을 낼 필요가 없다. 오노 요시오(小野吉男, 69세)씨는 노후해 폐어선으로 취급된 작은 어선 한 척을 공동 이용에 제공할 생각이다. 지진 피해로 두 척의 어선과 7대의 양식 시설을 잃은 그는 피해 이전 손자와 둘이서 1년에 1천만 엔의 수입을 벌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것은 중요하다. 망설임은 없다”고 말했다.

오모에어협의 생산물은 생협이 전면 구매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매주 생협에서 식량과 의류 등 생활 물자를 기부받아 가져다주었으며, 조합원들이 낸 수 억 엔의 기부금이 답지했다. 생산된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예약 공동 구입하는 소비자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오모에어협 이외에도 다로(田老)어협, 오오후나토시(大船渡市)의 오키라이(越喜来)어협 등 협동의 힘으로 소비자와 함께 재생·부흥의 길을 걷기 시작한 어협과 농협이 많다.

이와테현 행정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현내 111개 항구 가운데 105개 항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양식시설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고 1

만 4천 척 이상의 어선 중 90%가 피해를 입었다. 수산업 전체 피해액은 1천억 엔을 넘었다. 이와테현 내 24개 어협이 가입한 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각 어협의 창구가 되어 구입을 희망하는 어선 수량을 접수하여 일괄 구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사사키 야스히코(佐々木安彦)과장은 어업의 조기 재건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협동조합으로 결집하여 연대할 것, 소비자, 지자체 모두가 연대하여 자금과 사람, 노동력을 투입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복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재난 이후 일본은 대자본과 대기업에 의존하여 경쟁력으로 복구할 것인지 협동연대로 복구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진보적 협동조합론자는 대자본 도입에 의한 복구는 든든해 보일뿐만 아니라 정부와 재정계의 후원도 있기 때문에 유력해 보이지만, 대자본은 이익이 있으면 모이고 이익이 사라지면 바로 철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갖는 논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간나오토(菅直人)정권의 복구구상회의가 어떤 보고를 내놓을 것인가. 지금 조용한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협동조합진영은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이번 대지진과 원전사고는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참여 문제도 지금까지 설명했듯, 조합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생활의 재생이나 협동조합의 재건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자각하여 행동하는 협동조합은 재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정부와 대기업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버리게 될 것이다.

6. ‘서기2000년의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 원칙’

2010년 1년 동안 일본에서는 일본협동조합학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현재 일본협동조합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이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과, 1995년의『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ICA 성명』이었다.

우선 일본 협동조합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황이 계속되고 일본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국내투자에도 충분히 사용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 모두 주춤한 상황이다. 생협은 사업고 역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형점포를 운영하는 생협은 고정경비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조합원은 늘고 있지만 공급고는 감소하고 조합원 가운데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합원의 생활실태조사와 생협의 경영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점포경영 적자를 공동구매와 개별공급사업, 공제사업부문의 흑자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일본 생협의 실정이다. 이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생협의 주인이 되어 활동·운영·이용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 했듯이 조합원의 참여는 줄어들고 있다. 이 점에서 “현대에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기본적 의의와 역할에 대해 조합원 자신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협동조합의 존재이유와 중요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5장 ‘미래의 선택’으로,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 ① 앞으로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에 대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이는 인류에게 중요한 요구이며 이 부분에서 협동조합은 세계적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 ②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와 직장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 ③ 종래의 소비자협동조합은 단순히 자본주의기업과의 경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독특한 다

른 형태의 사업체로 알려지게 되고 조합원 수만큼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④ 도시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도시 속 마을 건설에 도움이 되는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과 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⁸

내가 볼 때 과거 30년 간 일본의 생협운동과 농협운동 내셔널센터(중앙조직)에서는 이를 지지한다고 거듭 말해왔지만 자신의 실천과제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동의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나는 로버트 오웬 협회의 연구 심포지엄에서 “레이들로 보고는 일본에서 실천되었는가? 아니면 실천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다.⁹

두 번째는 1995년 ICA성명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새로운 협동조합 원칙’이 발표되었을 때이다. 새로운 원칙에는 정의와 목적이 명시되어 소련사회주의의 붕괴가 보여주는 국가권력의 지배와 개발도상국 정부에 속한 협동조합의 과제 등을 염두에 둔 원칙이 목적의식적으로 반영되었다. 이 원칙 중에 제 7 원칙에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공동 이익 즉 ‘공익’(共益)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할 것, 다시 말해 공익(公益)도 추구해야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제 4원칙에는 자치와 자립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와 다른 조직에 종속·지배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있다.¹⁰

지금의 일본 법제도에서는 생협과 농협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이 다르다. 이 분단된 상황을 개혁하고 조합원에게 “우리는 같은 협동조합의 동지다”라는 사실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협동조합진영은 같은 협동조합진영으로 함께 연대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거품 경제의 붕괴로 경영이 어려워진 생협은 경영의 재건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보고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8 일본협동조합학회 편역, 『서기2000년의 협동조합』, 일본경제평론사, 1989년

9 『로버트 오웬 학회연보<35>』, 동학회 발간(2011년 3월)

10 일본협동조합학회 편역, 『21세기의 협동조합 원칙』, 일본경제평론사, 2000년

7. 기회를 놓쳐버린 ‘협동조합의 참여형 민주주의 - 조합원 참여의 재생’

1995년 ICA대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ICA성명’ 이외에 ‘협동조합운동의 참여형 민주주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일본 카나가와생협(ユープかながわ)의 지도자였던 야마기시 마사유키(山岸正幸)를 리더로 캐나다,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 연구자와 지도자 18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조직하여 3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실정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 문제의식은 “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경쟁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사기업과 차별성은 사라지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존재로서 성격이 열어지게 됐다. 많은 협동조합은 경쟁에 맞서느라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유산을 활용하지 못했다. 협동조합이 경제활동으로 치우치면서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가져와 조합원 참여 및 조합원 감소를 초래하였다. ‘참여형 민주주의’의 재구축은 우리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조합원 참여 시스템과 활동사례, 그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였다.

항목은 ①조합원 참여 확대 ②조합원과 경영의 관계 ③조직구조개혁이라는 3가지이다. 또한 결론에서는 다른 기업에서는 따라 할 수 없는 것, 즉 민주적 참여의 보증과 생협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사업과 운동 모두 성공을 거두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나는 이 결의를 매번 인용하지만 역량이 부족하여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카나가와생협에서도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면한 경영문제와 눈앞에 일들을 처리하는데 쫓겨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론과 사상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학자나 한가한 사람에게 맡기자”라는 품위 없는 말을 자주 하는데 ‘협동조합진영의 연대강화, 조합원 참여와 실천 강화’라는 다시없는 기회를 일본

11 『협동조합의 참여형 민주주의 - 조합원 참여의 재생을 지향하며』, 생협출판 국제공동프로젝트 카나가와생협 기획편집, 1996년.

협동조합진영은 두 번이나 놓쳐 버린 것이다.

8. 많은 협동조합을 생활의 장에서 활용하자!

조합원 참여 시스템의 좋은 사례에 대한 주제로 원고를 부탁받았는데 이에 바로 답하지 않고 과제와 문제점만 언급하여 죄송한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 내가 보고 들었을 때 “이 사례는 대단하다”고 느낀 것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앞에서 말한 지진 및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오모에어협과 연대하고 있는 생협이다. 카나가와생활클럽생협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모에어협에 대한 모금 활동을 펼쳤는데 많은 조합원이 참여해 짧은 시간에 7천만 엔이 모였다. 또한 정부·보수파 지사·정재계의 ‘대규모 통합-자본주의적 기업에 의한 복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행동이 널리 퍼지고 있다. 사람들은 “오모에어협의 수산물을 소비하자! 피해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자! 지금이야말로 생협이 공동구매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때이다! 피해 지역 협동조합의 재건에 연대하여 함께 복구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리사이클숍 ‘WE21Japan’의 활동이다. 이는 영국의 옥스팜(Oxfam)이라는 자선단체를 견학하고 힌트를 얻어 5천여 명의 생협 조합원이 모여 만든 단체로, 현재 56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품 기부를 받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은 약 2천만 엔의 수익금이 해마다 아시아 여성들의 자립지원과 교류활동에 쓰이고 있다. ‘WE21Japan’은 각 지역과 점포에서 이번 일본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큰 바자회를 열었다. 이 이벤트는 NHK 등의 방송국이 크게 보도하여 가족과 함께 나온 시민들이 이벤트를 즐기면서 피해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기부와 물건구입을 통한 지원 활동으로 찬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조합원들이 함께 뭉쳐 행동의 장을 마련하면 많은 조합원들이 하나 되어 참여한다는 사실을 생활의 장에서도, 소비의 장에서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복지클럽생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생협 사례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사 돌기, 개호 등 복지생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점차 다양화 되어 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생협이다. 기본적인 소비물품의 공급 외에 다른 서비스 제공은 많은 워커즈콜렉티브가 나누어 맡고 있다. 처음에는 소비물품 공급업무를 하였지만 조합원의 요구에 의해 가사도우미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개호용품 상담판매 뿐만 아니라 이동서비스도 시작하였다. 사업 영역이 넓어질 때마다 새로운 생산자와 제휴하여 일할 워커즈콜렉티브를 조직해왔다. 조합원이 더 많이 늘면서 공제 제도도 만들었다. 또한 사망자가 발생하기에 장례 사업도 실시하게 되었고 나아가 개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고령자 주택 설립과 운영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이 지역에 만들어져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요구에 맞춰 생산·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집단이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복지클럽 생협의 조합원은 약 15,000명이고 워커즈콜렉티브는 약 80개 단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2,300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40억 엔에 달한다. 이 사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 지적한 “도시 속의 마을을 만들자—다른 종류 협동조합의 다양한 조직화와 이들의 네트워크”가 일본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다.¹²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이 협동조합 방식의 점포를 도입하고 예술가를 데려와 작품 전시회장을 만들어 마을을 부활시켰다. 이는 말레니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사례인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¹³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와 규모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많은 생협이 사업의 통합·합병을 통해 양적·질적 발전을 실현해왔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도쿄생활클럽생협에서는 반대로 조직을 분할하고 소규모화하고 있

12 『지역에 널리 퍼지는 복지클럽의 다스케아이』,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연맹, 2005년.

13 츠다 나오노리, 「호주 말레니에 협동조합 커뮤니티와 지역재생 -레이들로보고와의 관련」, 『니지』, 2009년 가을호

다. 약 7만 명의 조직을 4개의 독립 생협으로 분할한 것은 당시 생협의 세계에서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도쿄생활클럽은 더 소규모화를 추진하려고 있다. 경영규모와 인사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금은 1만~2만 명 정도의 조직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는 지자체마다 한 개의 생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생활물자 공동구매 뿐만 아니라 생활과 일상의 서로 돕기와 복지, 문화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함이다.¹⁴

정리하면 생협 조합원은 지역에 거주하고, 일하며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나간다. 계속해서 조금 넓은 규모의 마을에 살며 교육과 장보기, 문화 및 스포츠를 즐기며 생활한다. 행정서비스는 지자체마다 있으며 특징도 있다. 생협은 그 속에서 기능하도록 하고, 물품사업은 연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간다. 하지만 생산자와 연대는 평소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인용한 ‘참여형 민주주의의 보증과 생협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의식 있는 조합원 자신이 해야 한다. 이 활동을 보증하는 생협의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활동이 넓어지고 다른 조직과의 연대도 넓어진다. 이번 지진과 원전사고로 협동·연대의 힘이 단단해져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화 창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자본과 국가권력의 힘에 의한 해결로 끝내버릴 것인가? 이는 사람들의 자각과 행동력에 달려있다. 

14 『도쿄생활클럽 제5차 장기 계획 - 2010년~2014년』, 도쿄생활클럽생협 제42회 통상총회의안서 별책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1.はじめに

私に与えられた主題は「日本の生協では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をどのように強化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した。編集者の意図の中には“日本に何か良いシステムがあったら韓国の活動の参考にしたい”という考えがあったの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このテーマに簡単に答えることは困難です。正直にお話すると、日本の生協の経営に当たっている専従役員も幹部職員も、理事長や色々な活動に参加しているリーダー的組合員・活動家たちも、一般の組合員も、更に申し上げれば協同組合や社会運動を研究している研究者たちも「組合員の参加」問題には頭を悩ませているのです。

組織が大きくなり、多様な組合員が増えて、生協の組織も機構も複雑になり、技術も専門化・高度化してきました。多くのビジネスは国際化し多国籍企業に依存しています。過去のように「何時でもどんな問題でも組合員が集まって話し合い、共通認識をもって解決すること」が時間的にも空間的にも困難になっているのです。知識・情報・課題を共有することが難しくなりました。そんな状態の中で、色々なシステムづくりを試みて実践してきたのですが、「これこそが解決の道である」という明確な成功例は少ないのです。また「成功か?失敗か?」を判断するその「評価基準」も明確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兎に角、組合員の活動参加は、過去に比べると少なくなっている事を皆が認めています。そこで先ず、私が聞いた幾つかの具体的な話を紹介することから始めることにいたしましょう。

「生協をつくり始めた頃には、1人の活動的な組合員が200人、いや300人も新しい組合員を加入させた例は少なくありませんでした。一軒一軒の家庭を訪問し、集会を開いて「生協とは何か?」を熱心に話して理解させ、加入させました。生産者との交流活動、危険な農業の研究会、世界の食糧事情、国内の有機農業を守ることが大切であること等、学習会には大勢の組合員が参加し、利用金額も増えましたが、今では参加者が少なくなっただけでなく、役員を引き受ける組合員も少なくなって組織運営にさえも困っています」

「生協のスローガンは“平和とより良い生活のために”でした。しかし生協のリーダー達は最近では、この“平和”を強調しません。組合員の中には色々な政治信条の人がいるから、“平和運動”が進歩的政党に関係があると思う人もいる。昔のことですが、“ソ連・社

会主義国は平和勢力であり、アメリカ・資本主義国は戦争勢力である——と共産党が主張している・・・生協は親共産党ではないのか？”という疑問と印象が人々の中にありました。しかし最近の指導者は、組合員が自主的に平和について勉強するのは構わないが、組織としては原水爆―核兵器反対運動は大いにやるが、それ以外の平和運動はやらないと言います。組合員の中には“アメリカ軍基地反対”“平和憲法擁護の運動”“原発反対―半永久的に放射能を出し続ける原発に依存するエネルギー政策を転換せよ！脱原発だ！”などの運動を推進したい組合員がいるのですが、指導者はこの運動を組織的にまた大規模にやることに消極的です。その理由は、指導者たちはまず生協経営のことを優先し“政治的な課題”は出来るだけ避けているのです」

「過去には家庭を訪問すると誰かいました。主婦とかお爺さん、お婆さんとか。そこで生協の話をしたり、集会への参加の呼びかける事ができました。しかし、最近では留守家庭が多く、家族数も少なくなっています。女性の大部分は昼間は働いている。就職の準備や文化講座に出かけている人もいます。昔のような集会や対話の機会が少なくなりました。子供が少なくなり、老人が増え、各家庭の食事の量も質も変化しました」

「組合員の参加が大切であり、それが協同組合の特徴の1つ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が、現実の生協はごく1部分の組合員を除いて大部分の組合員は主人公ではなく“お客様”になってしまった。生協の運営や経営から遠い存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2. 変化した社会経済と人々の暮らしと生協

以上の話を簡単に要約すると、日本の生協が大成長していた時代（1970年代から1990年までの約20年）と、泡（bubble）経済が崩壊し停滞して“失われた10年”と言われた時代（1990年～2000年の10年間）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新自由主義経済が浸透して非正規労働者など“新しい貧困層”が増大した21世紀以後の時代（2000年以後の10年間）。即ち2011年までの現在の時代には大きな変化があったのです。働いても貧困から脱出できないワーキングプア、学校を卒業しても就労できない失業青年の増大といった社会問題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きます。老人が増え、人口も減少し始めたのです。

更に言えば今回の2011年3月11日の大震災・原発震災以後は、更に大きく変化の時代が到来したと思います。この点をしっかり見据える必要があります。政府や財界の動き、これに対抗する市民社会の活動の強弱によって発展方向は変わるでしょうが、新しい創造的な道を切り開いてゆ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代に突入したと思っています。

この新しい時代への協同組合陣営の対応については後で更詳しくお話します。

ともかく過去の約40年間―約半世紀に近い歳月の間に政治・社会・経済が大きく変化し、人々の家族構成もライフ・スタイルも変化したのは明らかです。当然ながら生協組合員の要求も活動への組合員の参加の仕方も組織自体もこれらの変化に応じて改革を求められていたのです。ここでは変化した時代に必要な対応・改革の内容は何であったか？その内容や歴史については後にもう一度述べることにします。

3. 2012年は「UN協同組合Year」

UNは2012年を国際協同組合年に決定しました。これを迎えて日本政府、農協や生協で作る日本協同組合協議会（JCC）、協同組合Year実行委員会、協同組合学会など様々な団体が様々なレベルで多くの企画を立て実行しようとして論議を開始していました。

何故、UNが2012年を「協同組合Year」にしたか。それは簡単に言えば、協同組合への期待が大きくなったからに他なりません。世界は今、どの国家も財政不足に苦しみ、福祉や環境問題や様々な社会的課題に手が届きません。戦争や紛争の悲惨な状態、気象不順による災害、食糧不足は深刻ですが、最初にこの被害を受けるのは経済的・社会的な弱者です。他方、経済競争が激しく、企業は競争に負けないために競争力の強化、コストダウンのために物的・人的・技術的な資源を集中し、一部の企業を除いては社会貢献活動へ力を注ぐ余裕がありません。科学技術が発達しても、生産力が高くなっても、その恩恵を受けるのは社会の一部分の人であり、多くの人々が飢餓に苦しみ、失業に苦しみ、どんなに働いても貧困から脱出できない水準の人々がいて、一部は難民となって国外へ溢れています。日本でも非正規労働者が全勤労者の3分の1以上いるだけでなく、外国人の研修生や不法入国者と呼ばれている人々が多数います。日本の農業や漁業、中小企業の中には、彼ら彼女らの低賃金なしには経営が成り立たない工場、水産加工場、農場が沢山あります。経営者も労働者も綱渡りの経営や生活を強制されているのです。

ではこのような困難に誰が立ち向かうか？国家だけでも営利企業だけでもなかなか解決できない現実の中から、“協同組合”が世界的に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きたのです。

営利を目的とせず、人々の幸せのために協力しあう協同組合は、組合員の幸せのためだけではなく広く社会の利益のために活動しています。また協同組合は農業、消費、信用、医療など様々な分野で活動しているおり、国内のみならず国際協同組合同盟（ICA）という全世界に広がるネットワークも持っています。この協同組合の目的と役割を多くの国でもっと多くの人々が知り、参加してもらい発展させることは、全世界の人々の利益に合致すると考えられたのです。「今こそ協同組合の出番」である、というわけです。

しかし、これは論理的に考えられたものです。実際には協同組合と言っても、農協は農民のため、あるいはそこで働く役員・職員のための組織、生協は組合員の利益のための組織と見られていて、地域社会のため、大勢の人々の利益のために活動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また、「協同組合陣営といっても生協と農協と信用金庫は連帯して活動しているようには見えない」と思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

では、この「UN国際協同組合Year」の主題を何にするか？ある人は協同組合が一致して目指す「協同組合憲章」を創ることを提案しています。またある人は、「1980年の『西暦2000年の協同組合—Laidlaw Report』と1995年の『協同組合のIdentityに関する声明』が日本でどのように実践されたか？あるいは実践されなかったか？検証しよう！」と提案しています。またある人は「現代世界における協同組合の新しいVision」を創ることを提案しています。2011年の日本協同組合学会は以上のようにテーマの設定について活発な議論が行ってきました。その背景には、名前は同じ協同組合であ

っても、法律的にも、実態的にも目的も原理も原則も異なっている各種の協同組合を理念と行動で連帯させ、組合員自身の組織に立て直すことでした。そして2011年の春は、正に2012年に向って本格的な準備の活動が始められよとしていました。(日本は4月1日が新年度です)

4. 東日本大災害と原発災害で情勢が一変!

ところがご承知のように、日本で3月11日に東日本大震災が発生し、東京電力第1発電所は地震と津波、それに伴う大事故を起こし、制御能力を失い爆発し放射能が空へ海へ飛び散りました。原子力発電所の事故の内容と経過については既に多くのことが報道されているので繰り返しません。ここでは協同組合は破壊された生活と生産をどのように復興させようとしているのか?その方向をめぐる選択、論争、分岐点について述べたいと思います。何故なら、2012年の『UN国際協同組合Year』の主題も、「協同組合の再生・復興」になったのです。このことと「組合員の参加」についても触れます。

しかしその前に一言、日本の生協陣営が、非常に敏速に被災地の人々への救援活動を行ったことを述べておきます。特に被災地の1つである宮城県の「みやぎコープ」は全住民世帯の69%が加入している日本最強の生協組織の1つです。被災の後、全国各地の生協は直ちに支援物資、特に緊急に必要であったパンと飲料水を約2000台のトラックで運びました。生協支援だけでなく避難民のいる避難所や基礎自治体の活動拠点の総てに救援物資、医師、医薬品、人員を派遣しました。この救援活動がスムーズに行われた背景には兵庫県神戸市の大地震の経験がありました。この経験から、多くの自治体と生協は緊急事態の時には互いに助け合う協定を結び、訓練もしてきました。また、韓国をはじめ世界の多くの人々が同情を寄せ、お見舞いや寄付金を送ってくれました。これらの活動についても多くの事を書きたいのですが主題から外れるので、これにとどめます。

さて被害が大規模であり、特に原子力発電所の爆発は近隣地域は放射能の危険が多く、酪農も農業や漁業をすることも不可能になりました。日本の政治、経済、社会、技術、エネルギー供給の在り方自体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ことは必至です。ではどんな方向へ向って復興してゆくのか?日本政府は菅直人首相の下に復興構想会議を設置して6月末までに報告書をつくり、それに沿って復興方針を決めようとしています。しかしその方針には多くの問題を含んでいます。私はこの間に交された言説・論争の中から、2つの方向が対立し葛藤していることを述べる事にします。

5. 復興をめぐる2つの道の葛藤

第1の方向は、宮城県知事や自民党の小泉内閣の閣僚であった竹中平蔵など新自由主義経済学者たちが提唱している方針です。この勢力は、この災害を機会に中小規模の漁港・漁協や農場・農協を統合して大規模化し、国際競争力のある強い漁業・農業を作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その為には漁業協同組合が持っている漁業権を開放

し、農業へ一般企業が参入できるように特別の法律を作るべきである（いわゆる「特区」）。また、地方行政区画として従来の県を統合して大規模な道州制度にする。こうして大資本による国際競争力のある農業・漁業を行うことによって雇用の機会をつくる。また貿易を拡大するためにTPP（環太平洋連携協定）やFTAを積極的に推進する。さらに企業が投資をやり易くするために法人税を減税し、国家の規制を緩和する。こうすれば、大企業が育ち、外国からの資本も導入できるようになり雇用の機会が増える。若い世代も故郷を離れることなく漁業会社や農業法人に就職することが出来る、というものです。また、エネルギー政策については、日本政府と原発がある県の知事たちは「日本は資源の少ない国であるから原発の安全性を高める対策を実施した上で、継続して原子力発電を利用する」という立場をとっています。

これに対するもう一つの道は、地方分権の促進、地方自治の強化、地域循環型の地域経済構築、特に協同組合と基礎自治体が協力して、地域に密着した全住民・全組合員の参加によって「共生・共有・連帯」の方向へ政策に転換すべきである。そのためには生産だけでなく加工・出荷も共同で行い、都市の消費者とも連帯して新しい発展方法をつくろう。復興は組合員1人1人の参加の基に生産手段を共有（シェア）し協同組合と基礎自治体が中心的役割を果たすのが良い—という主張です。この主張の理論的・思想的背景は非常に興味深いのですが、既に動き出した具体例がありますからそれを紹介しましょう。

『「朝日新聞」（2011年5月15日夕刊、より）『漁船シェアリング』『自立再生へ宮古・重茂漁協』『50隻を共同で利用』—「誰もが経験したことのない未曾有の震災。一致団結して乗り切るしかない」アワビや養殖ワカメで知られる岩手県宮古市の重茂（Omoe）漁協（組合員役580人）。5月9日の組合員全員協議会で、集まった約400人に漁船や養殖施設の共同利用案を説明した。参加者は』拍手で賛同した。漁協所属の814隻が被災。国や自治体の支援政策が決らないなか、共同利用は「多くの漁師が無収入になる危機的状況」（伊藤組合長）を乗り越えるために考えた案であった。主にアワビやウニ漁、ワカメ養殖に使う小型漁船を共用する。今回の津波で沖に逃げた漁船や、修理すれば使えるようになる漁船など約50隻を総べて集め組合が所有。4地区に漁船を振り分け、収益は地区ごとに分かち合うと言う仕組みだ。また、新しく購入する船は総べて組合が所有する。全員に1隻ゆきわたる数は確保できた後、個人に引き渡す。新船の代金は2013年度以後の水揚げ代金から10%を天引きするから、漁船を失って再出発をする漁師たちは借金をする必要がない。小野吉男さんは（69歳）は、老朽化して廃船扱いにしていた小型漁船1隻を共同利用に提供するつもりだ。震災では、漁船2隻と養殖施設7台を失った。孫と2人で年収1000万円であったが、今後どうなるか分からない。それでも「こういう時には助け合いが大切。迷いはない」と話す。』

この重茂漁協の生産物は生協が全面的に購入しており、災害を受けた時から、毎週のように生協が食糧や衣料など生活物資を運んで寄付した他、数億円の寄付を集めている。

生産された水産物を全面的に適正な価格で予約共同購入している消費者の組織があることが漁民たちを勇気付けている。この重茂漁協の他にも、田老（Tarou）漁協、大船

渡市の越喜来（Okirai）漁協など協同に力で消費者と共に再生・復興の道を歩み始めた漁協や農協が数多い。

岩手県の行政当局によると「今回の地震と津波で圏内110漁港のうち105漁港が被害を受けた。養殖施設は壊滅状態で、14000隻以上あった漁船も90%が被災。水産業全体の被害額は1000億円以上を超えた。岩手県内の24の漁協に加入している県漁業協同組合連合会は各漁協が窓口となって新しい漁船の購入希望隻数を聞き、一括購入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佐々木安彦（Sasaki Yasuhiko）課長は「漁業の早期再建にはお互いに励まし合い、支えあうことが必要だ」と話す。

つまり、協同組合に結集して連帯すること、消費者も自治体もこれに連帯してお金も人も労力も、そして重要なことは運営にも参加して復興することである。

大資本、大企業に依存して競争力によって復興するか？協同連帯で復興するか？これが分かれ道である。進歩的な協同組合論者は、「大資本の導入による復興は力強く見えるし、政府や財界のバックアップもあるから有力に見えるが、大資本というのは利益があれば集まってくるが利益がないと直ぐに撤退するという性質を持っている。地域社会に根を張った人間の論理がないからだ」と指摘するひともいます。

菅直人政権の復興構想会議がどのような報告を出すか？いま、静かなヘゲモニー闘争が行われているわけです。協同組合陣営が試練の上に立た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ともかく、この大災害と原発事故は政治や経済だけでなく人々の生活も協同組合のあり方も鋭く問い直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組合員の参加の問題も、以上に見てきたように

組合員の参加なくして、暮らしの再生も協同組合の再建もありえなくなったのです。このことを自覚して行動する協同組合は再生する。しかし、自覚せずに政府や大企業にお願いするだけの人々は協同組合を捨てることになりかねません。

6. 『西暦2000年の協同組合』と『新しい協同組合原則』

2010年の1年間、日本では日本協同組学会をはじめ色々なところで、現在の日本協同組合の困難な状況を乗り切るためには何が必要であるか？論議してきました。その論議の中心になったテキストが1980年に国際協同組合同盟（ICA）決めた『西暦2000年の協同組合』と1995年の『協同組合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ICA声明』でした。

先に「日本の協同組合の困難な状況」ということを述べましたが、その内容を簡単に言えば経営状態が改善しないことです。不況が続いて日本経済は回復せず、非正規雇用の労働者が勤労者の約3分の1を占め、大企業は潤沢な利益を上げてそれを勤労者への賃金引上げに回さず、国内投資へも十分に使わず、結果として消費も投資も伸び悩んでいる。そのために生協の事業高も減少傾向があるわけですが、特に大店舗を抱える生協では固定経費がかかるために慢性的な赤字となっているのです。組合員の生活実態調査でも、生協の経営実態調査でも、組合員は増えているのに供給高は減少し、組合員の中でも貧富の格差が増大しています。

大まかに言えば店舗経営の赤字を共同購入・個人配達（個配）事業と共済事業部門の赤字で補っているのが日本の生協の実態です。この赤字構造を立て直すためには、組合

員が生協の主人として活動・運営・利用へ一層活発に参加するしかありません。しかし最初に紹介したように組合員の参加は少なくなっております。そこで「現代に於ける協同組合の基本的な意義と役割を組合員自身が深く論議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テーマに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です。

さて協同組合の存在理由と優先すべき事項について問題提起した『西暦2000年の協同組合』は色々なことを述べていますが、報告者の主張によると最も重要な部分は第V章「将来の選択」であり、本人はそれを要約して次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

今後、世界の協同組合は特に世界の食糧問題に、生産から消費までの全過程にわたって、その努力を集中すべきである。これは人類にとっての重要なニーズであり、ここでは協同組合は世界的な指導性を発揮することが出来る。

②労働者生産協同組合は、労働者と職場との間に新しい関係を築き、もう1つの産業革命をもたらす最良の手段である。

③従来の消費者協同組合は、たんなる資本主義企業と競争するだけでなく、それ以上のことをするような方向へ転換すべきである。そうすればユニークで、違った形態の事業体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り、組合員だけに奉仕するようになるだろう。

④都市の住人に奉仕するためには、都市のなかに村を建設するのに役立つ多くの異種協同組合の集合体をつくるべきであろう。』¹

私の見るところ、過去30年間、日本の生協運動や農協運動のナショナル・センターではこの報告を「支持すること」は度々語られてきましたが、「自分の実践課題」として取り上げ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同意するが実践しない」この指導者たちについて私はロバート・オウエン協会の研究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レイドロー報告は日本で実践されたか？またはされなかったか？」という報告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²

当時、つまり1980年代は日本の生協は成長期にあり、人々は自信に満ちていました。「自分たちのやり方は正しい。問題はない」と慢心していたのです。非常に重要な自己変革の機会を自ら見過ごしました。

第2のチャンスは1995年のICAの声明—「協同組合の定義、価値、新しい協同組合原則」ができた時でした。定義や目的が明記され、新しい原則にはソ連社会主義の崩壊に示されている国家権力の支配や、開発途上国の政府に従属した協同組合の課題などを念頭に置いた原則が目的意識的に取り入れられました。この原則の中の第7原則には、協同組合は単に組合員の共同の利益つまり“公益”にとどまらず「組合員が承認する政策にしたがって、地域社会の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に活動すること、つまり公益も追求すべきことを明記しています。また、第4原則には自治と自立が述べられていて政府や他の組織への従属・支配されることのないよう戒めています。³

現在の日本の法制度では、生協も農協も協同組合の定義も目的も異なっています。この分断されている状態を改革し、組合員に対して「我々は同じ協同組合の仲間である」ことを明記した法律を作ること。協同組合陣営は同じ協同組合陣営として連帯することが組合員の利益であるばかりでなく、社会の利益でもあることを明確にし、協同組合を立て直す絶好のチャンスでした。しかし残念ながら、泡経済の崩壊で経営が苦しい生協は「経営の立て直し」を第1義的な課題であると考え、この問題に正面から取り組みませんでした。

7. 幻となった『協同組合における参加型民主主義—組合員参加の再生』

1995年のICA大会では「ICAの協同組合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声明」の他に『協同組合運動の参加型民主主義決議』が採択されています。この決議は日本の「コープかながわ」の指導者であった山岸正幸（Yamagishi Masayuki）氏をリーダーとしてカナダ、スウェーデン、イギリス、イタリアなど世界的に著名な協同組合研究者・指導者18名を結集して研究チームを組織し、3年がかりで世界各国の実情を調査研究した結果をまとめたものです。

その問題意識は、「協同組合は営利企業との競争の激化の中で「私企業との差異を縮小し、協同組合の社会的存在としての性格を薄めてきました。多くの協同組合は競争に対応するために、人的資源の発揚を重視するという協同組合の民主的な遺産を生か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経済活動への傾斜は協同組合運動へ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危機をもたらし組合員参加および組合員の減少をもたらしました。……『参加型民主主義』の再構築が、私たちの緊急かつ重要な課題として提起されてくるのです」と述べています。そして世界各国の組合員参加のシステムや活動事例、その成功と失敗を分析しているのです。

項目は①組合員参加の拡大②組合員とマネジメントとの関係③組織構造の改革の3点です。これらについて述べ、結論として「他の企業には真似することのできないこと、すなわち民主的参加の保証とコープに参加するさまざまな機会」を十分に生かすことによってこそ事業にも運動にも成功を収めて現代の困難を打開できると述べています。⁴

私はこの決議—テキストを大切に度々引用していますが、残念ながら力足らずで普及していません。「コープかながわ」でも全く活用していないようです。当面の経営問題や目先の事柄への対応に追われて棚上げしているのです。「理論や思想では飯は食えない。そんなことは学者や暇な人に任せて置け」という品格のない言葉をよく耳にしますが「協同組合陣営の連帯強化、組合員参加と実践の強化」のまたとない機会を日本の協同組合陣営は2回も見過ごしてしまった！というのが残念ながら私の自己批判を込めた感想です。

8. 生活の場にたくさんの協同組合を！

折角、「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の良い事例を！」というテーマを頂きながら、それに正面から答えず、課題や問題点ばかりを述べて申し訳ありません。そこで最後に、私が見聞して「これは素晴らしい！」と感じた事例の幾つかお話しすることにします。

1つは先に述べた地震と津波で大被害を受けた重茂漁協に連帯している生協のことで。生活クラブ生協・神奈川では、重茂漁協への寄付金を組合員に呼びかけたところ、沢山の組合員から短い時間に7000万円集まりました。政府・保守的知事・財界の「大規模な統一資本主義的な企業による復興」という政策に対する批判と行動が広がりつつあるのです。人々は「重茂漁協の水産物を食べよう。被災地の農産物を積極的に食べよう！今こそ生協の共同購入活動を活発にしよう！被災地の協同組合の再建に連帯

して立ち上がろう！」と声をあげているのです。

もう一つの事例は「WE 2 1 Japan」というリサイクル・ショップの活動です。これはイギリスの「オックスファム」という慈善団体の見学からヒントを得て生協の組合員たちが5000人ほど集まって作った団体ですが、今、56店舗をもっています。近隣の人々から品物の寄付を受け、低価格で販売して、収益金を毎年約2000万円ほどアジアの女性たちの自立支援と交流活動にあてています。今回は日本の被災地の人々を支援する大バザールを各地域と店舗で開きました。このイベントはNHK等テレビ局も大きく報道し、市民が家族連れでイベントを楽しみながら、被災地のことを良く知り、寄付を集め、買い物を通じて支援した活動として賞賛を浴びました。これ等は僅かな例です。組合員同士が適切に呼びかけ合って行動の場をつくるならば、大勢の組合員は必ず立ち上がるということを生活の場でも消費の場でも実証していると思います。

もう1つの事例は、韓国では余り知られていないと思いますが、福祉クラブ生協というユニークな生協の話です。人口の高齢化とともに家事手伝い、介護など福祉活動はニーズが増え、かつ多様化しています。これに応じて組織されたこの生協は、基本的な消費材の配達以外のサービス提供はたくさんの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が手分けして行っています。最初は消費材の宅配でしたが、組合員の要求によって家事介護サービス、食事配達サービス、介護用品の相談販売が加わり、更に移動サービスも始めました。その度に新しい生産者と提携し、仕事をする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を組織してきたのです。更に組合員が増えると共済制度がつくられました。また死亡する人が出てくるので葬祭事業もするようになり、ついには一生住む家であるケア付高齢者住宅の建設と運営もす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この話をするのは、協同組合が本当に地域に組織され、組合員が自分の生活を協同組合を活用して行うようになれば、ニーズに応じた生産・サービスの創造—そのために労働をする集団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実証したのです。組合員は約15000名、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は約80団体、ワーカーは約2300名、年間事業高約40億円です。この事例によって何を言いたいかというところ『西暦2000年の協同組合』が指摘している「都市の中に村をつくる」—異種協同組合の多様な組織化と、それらのネットワークが日本でも既に実践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⁵

同じような事例は日本だけでなくオーストラリアにもあります。過疎の村が協同組合方式の店や芸術家の受け入れや彼らの作品の展示場作りへと発展して町が復活したのです。「マレーニ協同組合コミュニティ」のことですがここでは指摘だけに止めます。⁶

最後に組織形態と規模の問題です。日本では多くの生協が事業の統合・合併を通じて量的・質的な発展を実現してきました。それは今も続いています。しかし生活クラブ生協東京ではその逆に、組織を分割して小さくしているのです。僅か約7万人の組織を4つの独立した生協に分割したのは、当時の生協の世界では“異常”に見えました。しかし生活クラブ東京では更に小さくしようと考えています。経営規模や人事管理などを考え、今は1万人~2万人程度の組織になっていますが、将来は自治体ごとに1つの生協をつく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それは、組合員の生活物資の共同購入だけでなく、生

活と日常の助け合いと福祉と文化活動などあらゆる面で有機的に繋がろうとしているからです。⁷

簡単に言えば生協の組合員は、まず地域に住んでいて働き遊び人々と共に暮らしている。次にもう少し広い範囲の町に住んで教育や買い物や文化スポーツをして暮らしている。行政サービスは自治体ごとにあり特徴もある。生協をその中で機能するようにし、生活材の共同購入などは大連合して合理的・効率的に行う。しかし生産者との連帯は常に多様なチャンネルで保つようにする。その為には先に引用した「参加型民主主義の保証とコープを活用して参加する様々な機会」を惜しみなく創ることである。

誰がやるか？それは当然ですが意思ある組合員自身です。その活動を保証する生協の仕組みと文化をつくることによって活動は広がり、他の組織との連帯ネットワークも広がってゆく。今度の震災と原発事故で、協同・連帯の力が強まり原発に依存しない新しい文化の創造に向うことができるか？それとも大資本と国家権力の力による解決に終わってしまうか？それは人々の自覚と行動力にかかっているのです。(2011年5月20日) 

- 1 日本協同組合学会・訳編『西暦2000年の協同組合』（日本経済評論社1989年）
- 2 『ロバート・オウエン協会年報<35>』（同協会刊、2011年3月）
- 3 日本協同組合学会・訳編『21世紀の協同組合原則』（日本経済評論社2000年）
- 4 『協同組合における参加型民主主義—組合員参加の再生をめざして』（コープ出版 国際共同プロジェクト・コープかながわ企画編集、1996年）
- 5 『地域に広がる福祉クラブのたすけあい』（福祉クラブ生活協同組合編、2005年）
- 6 津田直則『オーストラリアのマレーに協同組合コミュニティと地域再生—レイドロー報告との関連で』（協同組合経営研究所『にじ』2009年秋号）
- 7 『生活クラブ・東京第5次長期計画—2010年~2014年』（生活クラブ生協・東京第42回通常総会議案書・別冊）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때/곳: 2011년 5월 17일(화)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회의실

참 석: 이금자 (경기두레생협 이사장), 이필구 (YMCA 등대생협협의회 전 간사),

김영숙 (아이쿱부산푸른바다생협 전 이사장)

사회/정리: 김아영 (생협평론 편집위원)

사회: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생협의 사업과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생협의 사업 규모와 조직의 확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규모의 확장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협의 사업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각자 다른 생협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각자 속한 생협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생협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영숙: 아이쿱생협은 현재 도농상생(都農相生)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에 윤리적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실패한 협동조합들이 많은데, 참여의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쿱생협은 현재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조합원의 힘을 모아 협동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YMCA생협은 처음에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을 고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YMCA에서 A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운동 즉,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1980년대에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 사회를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먹거리를 통한 상생의 노력을 생활운동의 측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YMCA생협은 크게 등대생협과 지역 농민회와 함께하며 지역운동에서 출발한 지역생협, YMCA 내에 존재하는 아이쿱생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YMCA생협은 생명평화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금자: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 두레생협은 생활상의 요구를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의 객체였던 주부들이 생협을 통해 구매를 결집하고, 소비의 주체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 시작할 당시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대중과 함께 살아 숨쉬기 위한 대안 운동으로 생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작은 먹거리 하나하나가 식품안전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초기에 가졌던 지향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을”이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직거래를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라는 말처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경기두레생협 이사장)



사회: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 서로 다른 생협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향점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풀어 나가는 방법은 각자가 속한 생협이 처한 환경과 역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이쿱생협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아이쿱생협은 최근에 사업의 규모와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김영숙: 저는 협동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가능해 지려면 규모에 맞는 소비와 생산이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사업은 집중화하고 조직은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우, 처음 15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10,000여 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는데요,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펼치기 위해 4개의 지역 생협으로 조직을 분화하고 사업은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잘 몰랐는데 조합의 사업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우리밀 수매를 위해 차입 운동을 할 때는 조직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우리밀이나 우리쌀 수매를 위한 자금이 순식간에 확보됩니다. 이걸 보면



이필구 (YMCA 등대생협협의회 전 간사)

서 활동가들도 신이 나고 조합원들도 협동의 힘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금자: 김영숙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협동조합 사회 건설’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협동조합이 규모가 성장하면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틀 내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의 건설’을 구체적인 우리의 지향이나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숙: 저는 분배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적인 방식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업도 자본에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만들고, 출발부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식품, 의료, 보건,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협동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구: YMCA등대생협의 관점과 생각은 기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1990년대 초반에 등대생협이 만들어진 배경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당시 YMCA 내에는 이미 다양한 성인 클럽들이 존재했지만 세상을 변

김영숙 (아이쿱부산푸른바다생협 전 이사장)



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체로 주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고민하다가 등대모임이라는 것을 시도하고 이것이 등대생협이 되었습니다. 등대모임은 교회의 구역 모임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작게는 5명이나 7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진행하고, 물품을 공동체로 공급받습니다.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역할을 맡게 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등대생협은 이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자의 주체적인 활동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성장한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교육 주체로 활동하고 등대생협의 이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YMCA 운동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주체를 발굴해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등대생협 만큼 좋은 열개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주체의 성장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등대모임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생협의 규모 역시 이에 맞춰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어려움은 등대생협이 등대모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부들이 건강한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고, 생협은 이것을 위한 좋은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협동조합 사회 건설이라는 부분은 꿈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은 그 나라의 형성 배경, 합의와 절차 구조 등에 달려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정착되



김아영 (생협평론 편집위원)

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윤리적인 소비자로 성장해 갈 것인가, 이기적인 소비자로 성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협 내에 존재하는 거죠.

이금자: 경기 두레생협도 생협의 규모와 관계성의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생협은 다양한 관계성, 운동성, 사업성 등 다양한 측면으로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생협에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을 것인지에 대한 화두가 존재하고, 결국 답이 없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의 과제가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경기두레생협은 매장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업과 조직은 ‘따로 또 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협의 사업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생협이 지향하는 목적을 잃을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정신,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현해갈 것인가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조합이든 생협의 주체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위해 조직 내에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봐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살아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기두레생협이 현재 7개의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이금자: 저희는 사업 확장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편리성 만족이라는 부분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매장은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매장 사업을 단순히 사업 확장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많은 조합원이 출자나 차입을 할 수 없었겠죠. 결국 사업의 경제적 목표와 조직의 사회적 목표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YMCA등대생협은 조합원 개인의 성장을 통한 조직의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죠.

이필구: 초기에는 형식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등대모임의 형식을 잘 만들어서 그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봄에는 촛불대학을 하고, 가을에는 생산지 견학, 여름에는 촛불수련회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촛불들의 마을모임 발표를 해마다 반복하면서 등대모임은 등대모임대로, 분과모임(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은 분과모임대로 운영됩니다. 실제 YMCA등대생협의 교육지기 모임에서부터 출발하여 안양에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협을 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조합원의 성장이었습니다. 주부였던 활동가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조직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잘 짜인 성장의 틀은 좋았지만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바람에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게 된 거죠.

사회: 아이쿱생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직의 성장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조직의 급격한 성장을 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영숙: 아이쿱생협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마을모임입니다. 현재 아이쿱 부산푸른바다생협의 경우 43개의 마을모임과 16개의 동아리 모임이 다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모임은 조합원과 소통하고 활동가를 발굴하는 좋은 장입니다. 생협에 대해 전혀 몰랐던 조합원이 마을모임에 참여해서 모임을 주도하는 활동가가 되어 지역생협의 핵심 활동가가 되는데 2~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YMCA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모임을 유지하고 조직의 성장과 연결 짓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도 활동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필구: 개인적으로 활동가의 배출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가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부들은 건강한 일 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협동조합의 방식 또는 구체적 사업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거리 중심의 생협 운동이 진화하고 확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협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생협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한 거죠. 저는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 일하는 유급 자원봉사자를 보고 마을 속에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응집력이 필요한 일을 직접 해 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협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자: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활동가 비전의 문제를 고민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활동가들에게 협동조합이 좋다는 당위적인 주장만을 반복하며 이끌고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 활동가도 결국 조합원이라는 풀에서 발굴되고 성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의 확대로 조합원을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 생협의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자: 경기두레생협은 조합원이 12,000명입니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참여의 형식을 체계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을 6개로 나누고, 이사회와 마을 모임, 소모임 등 한 달 동안 진행되는 36~40개의 모임을 통해 생협 소식이 순환되고, 소통 될 수 있도록 노력했죠. 올해 총회의 경우, 작년 한 달 내내 대의원 선출 모임을 가지고, 원하는 조합원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혹시 간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의식성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조합원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솔직히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권외의 경우 마을모임을 진행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마을모임의 공간으로 내놓으려는 조합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숙: 아이쿱 부산푸른바다생협의 경우 조합원의 참여는 잘되는 편이라고 봅니다. 마을 모임의 경우, 개인적으로 집을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는 조합원이 많을 때는 동아리 모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자금 의무 증좌 운동을 했는데, 전체 조합원 중 30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출자금 의무 증좌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조합원의 참여 방식 중 한 가지가 사업의 이용과 출자 등 경제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이금자: 조합원의 참여가 잘되는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영숙: 자원 활동가들이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모임 지기나 위원회 활동을 하는 자원 활동가들이 일반 조합원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중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직원으로, 활동이 필요한 사람은 활동가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조합원의 참여는 결국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실현하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생협의 이사회 역할과 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사실 이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YMCA등대생협의 경우 생협 외의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간사들이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다

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실무자들의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다 근원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최근 광주 아이쿱생협에 갔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의 눈빛이 반짝거리어서 놀랐습니다. 이 분들이 무엇 때문에 열정을 가지는 걸까요? 현대 사회는 예전과 다르게 관계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점점 개인화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함께 사는 세상인데, 승자독식의 사회 구조에 굳어지면서 이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개인화 되었지만 다른 마음으로는 어디엔가 속하고 싶은 마음이 양립하는 거죠.

교육의 강화를 많이 이야기 하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기쁨이 없다면 그러한 교육은 인공호흡기를 붙이는 교육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직접민주주의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들을 위한 예산을 짜는데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상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통한 즐거움 외에 또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조합원의 참여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협 예산의 일부를 실제 마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모임을 통해 조합원을 참여 시키는 것입니다.

이금자: 이사 선출 방식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추천을 통해서 총회에서 승인되는데, 아마 5년 정도가 지나면 이사 선출 방식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사장이나 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훨씬 더 이사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사회 안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룹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되면,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비전문가들이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

계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영숙: 아이쿱생협은 이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아이쿱 부산푸른바다생협의 경우 최소한 생협 활동을 2년 이상 하고 마을모임 지기 활동을 한 사람이 이사로 선출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마을모임 활동을 중요하게 보는 것도 있고, 이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조직 활동의 경험을 가질 때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제 이사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사로 활동하는 조합원의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이 시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사회: 확실히 현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온 분들이라 그런지 나누는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생협에서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5월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시고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1. 농협개혁은 왜 필요한가?

‘농협개혁’은 농업계의 오랜 화두이다.

“농민을 위한 가공 판매 유통 사업은 소홀한 채 은행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농민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협의 순이익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은 증가한다.” “중앙회는 지역조합 위에 군림하는 거대 공룡조직이다.” “협동조합인데도 조합원은 무관심하고 주인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농협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말들이다.

그렇다.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국가주도로 탄생한 그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해 과연 ‘협동조합’인지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치적인 협동조직”이라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정의가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다.

한국 농협의 주요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농협중앙회는 전 세계 유례없는 비정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이 가입하여 설립한 지역조합들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우선해야 할 중앙회가, 오히려 지역조합 위에 군림하고 자체의 이익 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회는 경제사업 연합기능과 상호금융 연합기능, 은행금융, 공제 및

공제사업 연합기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관리기능, 지도감사기능, 교육훈련기능, 대정부 농정활동 등을 한 조직체에서 동시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기능과 사업체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적 기능에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라는 이질적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협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적 기능에는 소홀해졌고, 정부 사업을 대항하다보니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농민 조합원인데도 정부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에 농협중앙회가 참여하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어도 아무런 입장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기능에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다보니 전문성은 떨어지고 손쉬운 은행사업에 매몰되어 조합원을 위한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회 경영진은 막대한 자금력과 권력으로 개혁 요구를 무마하며 기득권 옹호에만 안간힘을 쏟아 왔다.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농협이 센지 대통령도 센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 농협중앙회 스스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찾고 개선해나갈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사업은 뒷전이고,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 3부문으로 구성되는데, 2009년말 현재 총자산 271조원 중 신용자산은 76.7%인데 반해 경제자산은 2.0%에 불과하며, 인력 구성도 신용부문(신용 73%, 경제 18%, 교육지원 8.8%)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경영구조이며, 은행금융업 중심의 신용사업도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중앙회의 주인은 지역조합, 주인은 조합원 농민이지만 농업과 농민을 앞세워 도시민을 상대로 은행금융업에 치중하는 구조인 것이다.

중앙회가 하고 있는 경제사업도 산지조합과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로 거래교섭력을 높여야 하나, 대형유통업체 또는 식품가공업체와의 거래실적이 극히 미흡하고 농협 전체의 소비자시장 점유율도 약 10%대에 불과하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나마 중앙회 경제사업도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사업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사업 중심이라는 점이다.

지역조합 역시 ‘돈 장사’에 치중했으며, 이마저도 농민 조합원보다 비농민 조합원 혹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유지되면서 중심이어야 할 경제사업은 환원사업, 보조사업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 농민의 원성을 사 불신당하고, 자발적 참가와 이용을 조직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조합원 농민의 농축산물을 제대로 팔아주지 못하는 구조로 고착화 되었고, 조합원은 농산물을 출하하고 조합은 농산물의 판매를 책임지는 해외 농협의 일반적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립되지 않고 있다.

	신용	경제
지역농협 매출총이익 비중	75.6%	24.4%
	조합원	준조합원
농협 조합원 수	2,338,969 명	12,785,551 명

(출처: 농협연감(2010))

셋째, 철저한 하향식 구조로, 조합과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권이 미흡하다
 현재 한국 농협은 중앙회-도지역본부-시군지부-회원조합의 4단계로 이어지는 철저한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하향식 체계의 정점에 놓여 있는 중앙회가 정부사업 대행, 지역조합 지도감독, 신용 및 경제사업까지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조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는 조합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조합 이사회의 의결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앙회의 획일적인 규정 시달과 지침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조합원에게 조합 설립과 해산의 권리¹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비민주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 이명박식 농협개혁의 시작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보니 정권 출범 초기마다 협동조합개혁을 농정 개혁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그러했다. 하지만 정권마다 소위 개혁의 칼은 빼 들었으나 거대 권력화 된 중앙회 경영진의 강력한 저항과 정부의 묵인, 농협의 실제 소유주인 농민조합원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 속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 것이 지난한 농협개혁의 역사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출발은 역대정권과 좀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농수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선정되었으나 농협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집권 첫 해,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파문으로 정권 자체가 위기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고 바빴는지 농협개혁은 주요 농정과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그런데 두 가지 계기로 인해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가 전(前)정권이었던 참여정부, 그것도 권력의 핵심인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이 잡듯이 파헤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08년 하반기부터 노대통령 친형의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더니 세종증권 비리가 폭로되고 농협중앙회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리고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농협을 질타하자 농식품부가 일사천리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개혁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둘째는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중앙회 신용사업도 심각한 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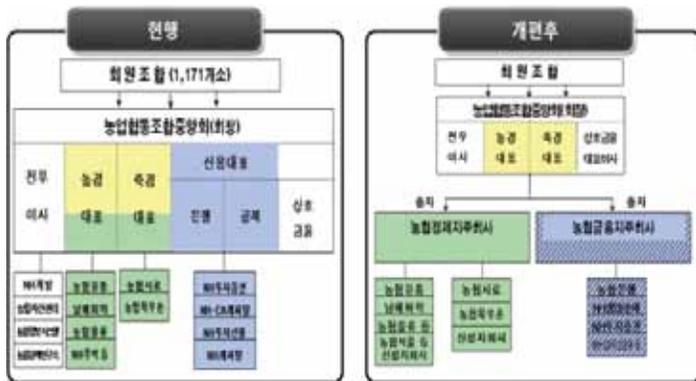
¹ 농협법상 조합해산 권리는 인정되고 있지만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규모에 상관없이 구매조합, 판매조합, 가공조합, 유기농업협동조합 등을 신규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품목조합의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품목농협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조합의 성공률은 낮은 상황이다.

맞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이익으로 경제사업, 지도사업의 적자를 보전한다는 논리를 들어 이질적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반대해왔고, 중앙회 사업의 70% 이상을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해왔다. 그런데 심각한 금융위기로 인해 중앙회 신용사업도 위태로워지자 신용사업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 중앙회 내에서도 금융지주회사 분리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3.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내용

2009년 12월, 정부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본격화 되었다. 당시 농업계에는 농협이 재경부 출신의 고위관료까지 영입하면서 신용사업 위주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거대 글로벌 금융그룹 육성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 맞춰 중앙회의 신용사업만 분리하여 금융그룹화 하려다보니,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경제사업도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많은 논란 속에 지난 2011년 3월11일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바람대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출처: 농식품부 2011.3.11 보도자료)

① 사업 분리방식

-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12.3.2 발족)
- 중앙회와 기존 경제부문 자회사를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분리되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과 기존 신용부문 자회사로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

② 경제사업

- 중앙회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나머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함
- 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 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

③ 금융사업

-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
-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

④ 정부 지원

- 중앙회 사업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

⑤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

-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로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15.3.11)에 실시

4.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직후 “17년만의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이제 “농협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한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입장만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농업계가 요구해온 중앙회 신경분리는, 현행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비사업기능,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개편된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회원 위에 군림하는 공룡화 된 중앙회의 권력구조를 회원을 위한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주회사 방식으로 개편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럼, 이번 농협법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회복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농협개혁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 운동체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농협법 개정은 이를 또다시 외면하였다.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운동적 기능에 충실한 것이 전 세계 모든 협동조합 중앙회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운동적 기능의 중앙회로 개편을 또다시 거부하였다. 국회에 제출되어 동시에 심사를 했던 농협법 개정안 중, 강기갑 의원안과 김춘진 의원안은 농업계의 오랜 요구를 개정안에 담았으나, 농협중앙회의 강력한 반발과 이에 동조한 정부의 묵인 속에 또다시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중앙회와 정부의 운동적 기능 복원 거부는 사실상 협동조합 중앙회로서 정체성 회복에는 관심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앙회 경영진에 의한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며 자재이윤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중앙회 경영진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회 은행금융사업과 일부 경제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하였으나, 이는 중앙회가 직접 사업하던 신용·경제사업을 출자지배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과거 재벌들의 구조조정본부와 같이 신용·경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전략본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형식적으로는 회원조합이 농협중앙회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회원조합이 농협중앙회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원조합이 농협중앙회의 사업과 경영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듯, 지주회사 방안에서도 왜곡된 지배구조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의 핵심은 농협중앙회가 농협 전체의 사업과 경영, 정책창구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독점적 지위는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를 출자하여 설립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지주회사의 설립으로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약화되고 중앙회 경영진의 지배력만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돈업을 하는 농민조합원과 목우촌(현 중앙회 자회사)의 관계는 법 개정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멀어짐에 따라 양돈농가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기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 법 개정 전후 지배구조단계 비교 >

※법개정이전 : 조합원→회원조합→농협중앙회→자회사(목우촌)

※법개정이후 : 조합원→회원조합→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목우촌)

기업 소유주의 감시와 통제력이 약화될수록 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기회주의적 경영행위가 강화된다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농협법 개정 최대의 수혜자는 농협중앙회 경영진들이 될 것이며,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며 자체 수익만을 추구하는 중앙회의 모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셋째, 경제지주회사는 회원 중심의 경제사업 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다

그동안 중앙회는 회원조합들의 가공유통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에서 회원조합의 사업과 경쟁하여 마찰을 빚곤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김치 가공사업과 목우촌 사업이었다. 이제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지주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에 경제지주회사의 각종 품목별 자회사는 회원조합의 판매 및 가공사업과 경합하거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중앙회가 과수연합회 등 품목별 연합회 설립과 발전을 방해한 사례에서 보듯, 경제지주회사는 향후 회원조합들의 자유로운 품목별·축종별 연합회 건설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넷째,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질적 사업의 동시수행은 계속되고 있다

운동적 기능부문이 분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가 직접 사업하던 신용·경제사업을 출자지배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실질적인 분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사업 부문에서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을 분리하지 않고 여전히 중앙회가 동시수행하고 있다.

결국 기존 중앙회의 사업 가운데 은행금융사업과 일부 경제사업 부문만 직접 수행에서 출자 지배 구조로 방식을 전환하였을 뿐 이질적 사업 수행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농협 금융거래 중단사태로 인한 신용사업 수익성 악화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내년 3월부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미 일반 시중은행보다 경쟁력과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번 금융거래 중단사태로 농협 신용사업의 수익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농협 금융지주회

사는 끊임없이 자본 부족 현상에 시달릴 것이다. 이에 부족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남아 있는 자산을 금융지주회사에 계속 투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결국 농협의 경제사업까지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농협 신용사업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과 회원 조합에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철저한 하향식 조직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시군지점들과 지역조합 상호금융간의 경합은 더욱 확대 될 것이며, 조합장 선거 동시 실시로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정부가 강제로 조정함에 따라 선거권 침해와 위헌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5.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첫째, 일상적·지속적·조직적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초반에 연례행사처럼 추진되는 농협개혁 논란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 농협개혁의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조합원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가 지속된다면 농협개혁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에서 혹은 읍면 단위에서, 시군 단위나 광역 규모로 생산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자주적 협동조합 운동이야말로 농협 개혁운동을 조직하고 조합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진정한 협동조합을 건설할 주체역량이 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협동조합 간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동일 유형의 협동조합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이 지역단위에서 또는 광역단위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종협동조합 간의 협동도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협동조합 간 협동은 상호이익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내 협동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켜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농협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난했던 농협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면, 농협개혁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구성원의 주체적 노력과 아울러 범국민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계기를 잘 살려 농협의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농협법 재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 3.11 농협법의 재개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동조합 간 연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험료만 내면 병원에 가서 따로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자”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건강보험이 있지만 비급여가 너무 과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이렇다. 감기 정도 걸린 사람은 진찰받고 약 받는 데 보통 3~4천 원 정도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안되지만, 중증질환에 걸린 경우는 무척 심각하다. 중병에 걸리면 치료도 오래 해야 하고 입원을 해야 할 때도 많다. 또 동네 병원 보다는 큰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치료비가 몇 천 만원씩 나오는 게 다반사다. 가난한 집은 병원비 대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난다.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어도 병원비 중 어떤 항목은 보험이 적용되고 어떤 항목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병원비가 100만 원 쯤 나와도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기 때문에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보통 ‘급여’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준다는 뜻이다.

문제는 병원에 갔다가 “보험 적용 안 되는데요”라는 말을 듣는 항목이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은 ‘비급여’라고 한다.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서 돈을 안 준다는 뜻이다. 보험에서 돈을 주는 급여 항목은 진료비가 사전에 다 정해져 있고, 따라서 병원에서 마음대로 돈을 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비급여는

다르다. 가격을 병원 마음대로 정한다. 비용은 물론 환자가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비급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대는 게 아니다보니 공단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하지 않는다. 반면 병원 입장에서는 가격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 보다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법이나 의료 기계 같은 걸 자꾸 개발하고 도입하는 게 돈 버는 데 훨씬 쉽다. 따라서 비급여는 자꾸 늘어나고 공단은 비급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박살나면 그건 비급여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너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실한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보험료도 병원비도 부담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적게 내는 사람 순서로 밑에서 받은 1년에 200만원까지만 내면 되고, 중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00만 원, 나머지 20%는 400만 원까지만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환자가 내는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급여 중에서 자기가 내는 돈을 200~4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럼 비급여는? 그건 그냥 환자가 알아서 다 내야 한다.

결국 비급여까지 다 감안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이 60%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나라에서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 중에서 공단이 걷은 보험료로 책임지는 게 60%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40%는? 이걸 당연히 환자들이 따로 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따로 내고 아프면 병원비 또 따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중부담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한테 걷는 돈 중에서 공단 자체를 운영하는 관리운영비로 3% 정도 쓰고 나머지는 몽땅 보험료로 쓴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보험료가 총 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30조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 총액의 약 60%라는 것이다. 나머지 40%, 약 20조 원 정도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는 돈이다. 이 20조 원을 내느라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이 20조 원을 감당하지 못해 죄다 민간보험에 가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집 당 다달이 평균 약 17만 3천 원의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특약가입 같은 상품까지 더하면 약 26만 원씩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 가입자는 1인당 3만 6천 원, 직장 가입자는 2만 9천 원, 가구당으로 따지면 대략 월 8만 2천 원 정도를 내고 있는 셈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집집마다 건강보험료와 민간보험료까지 더해 25만 원이 넘는 돈을 다달이 내고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병원비 부담도 큰데, 건강보험료에 민간보험료까지 하면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취지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본인부담금을 1년에 100만 원까지로 하자

건강보험 하나로 본인부담금을 무조건 1년에 100만원까지만 받자는 주장이다. 보장성은 전체적으로 80%대 후반까지 하고 입원치료는 90%까지 달성하자는 주장도 한다.

실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입원치료이므로 입원치료가 아닌 경우는 80% 후반 대까지만 달성해도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런데 입원치료는 그렇지 않으니까 최소한 90%까지 해주자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1년에 100만 원 이상은 안 들어가게 하자

건강보험 하나로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에 가면 무조건 내야 하는 특진비가 보험이 적용된다. 1인실이나 2인실은 굉장히 비싼데 이것도 보험이 적용된다. MRI도 지금은 특정환자에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모든 경우에 다 보험이 적용된다. 또 입원환자들은 간병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간병서비스가 입원환자들에게 기본으로 딸리

지 않으면 식구들이 매일 환자 돌보느라 일을 못한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환자 간병하는 일은 대부분 여성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일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주장하는 대로만 되면 간병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노인 틀니도 보험 적용해주고, 치석 제거도 보험 적용해주는 등 치과의 보장성도 높아진다.

11,000원을 더 내서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자

보장성 90%, 본인부담상한제 100만 원. 이렇게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건강보험 수입은 늘리고, 쓸 데 없는 지출은 줄이면 된다.

우선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제안하는 게 1인당 1만1천 원씩 더 내자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모든 국민이 개인 당 1만1천 원씩 내자는 건 아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1만1천 원씩 더 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부담이 크다. 지금 보험료 내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 5명은 아예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대신 부자들은 1만1천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내자는 건데, 평균을 내자면 1만1천 원이라는 이야기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34% 인상하자는 거다. 1만1천원을 더 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일단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보자. 직장의료보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100원을 내면, 회사도 100원을 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과 회사가 낸 돈 전체의 20%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원을 낸다. 정부:기업:개인이 5:5:2로 나누어 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개인이 1만1천 원을 더 내버리면 기업은 개인이 낸 만큼 내야 하기 때문에 역시 1만1천 원을 더 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당연히 정부도 개인과 기업이 더 낸 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결국 개인이 1만1천 원을 더 내면 건강보험 수입은 1만1천 원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자동으로 더 낸 돈이 추가되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수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

성을 9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 도입으로 지출을 줄이자

그런데 수입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야 할 곳도 많다. 돈을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걸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가입자가 돈을 더 낸다고 해도 돈이 모자라게 된다. 어디서 어떻게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가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행위별 수가제가 문제다. 수가는 가격을 말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말 그대로 가격을 행위 하나 하나에 다 매기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주사료 얼마, 소독료 얼마, 처방전 발행하는 데 얼마 하는 식이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똑 같은 병이라도 환자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모든 분야에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이런 저런 걸 많이 하게 된다. 당연히 병원 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환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건강보험도 필요 이상으로 지출해야 할 일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자는 것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주장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어떤 병을 치료하는지에 따라 병원이 어떤 치료법을 쓰든 가격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일부러 치료를 더 하거나 비싼 약을 쓸 필요가 없게 된다.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되는 돈을 낼 일이 없어지게 된다.

물론 포괄수가제 하나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질병별로 치료비를 정해 놓으려면 병원마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대체로 비슷해야 한다. 맹장수술 같은 건 어느 병원을 가나 치료 방식이 대체로 같다. 말하자면 치료과정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럴 때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법이 천차만별인 질병에 대해서 무조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떤 나라에서는 총액계

약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총액계약제는 대형병원별로 1년 진료비를 1조원으로 하자든가 하는 식으로 총액을 정해 놓는 것이다. 병원협회와 복지부가 만나서 협상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원도 과도한 진료를 할 이유가 없게 되고 건강보험 지출도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애초에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지 않으면 치료할 일도 적어진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발달해 있긴 하지만 아프기 전에 돌봐주는 예방의학보다는 아프고 나서 돈 내고 치료해주는 의학만 발달해 있다.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두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건강보험의 재정도 나아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주치의제도다. 의사 한 명이 주민 몇 명에 대해 주치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자들만 주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서민도 두자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평소엔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큰 돈 들어가는 병에 걸릴 일이 줄어들게 된다. 또 늘 믿고 만나는 주치의가 있으면 가벼운 병만 걸려도 종합 병원 가서 돈 쓰고 오는 일도 없게 된다.

공공병원 확충과 약제비 지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애초부터 비급여 서비스를 만들어 내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갖는 민간 병원들 말고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 병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 병원들끼리 환자 유치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동안 정부는 비급여 서비스가 등장하면 그 중 일부를 보험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왔다. 그러나 그럴수록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가 계속 등장해 도루묵이 되었다. 대부분 민간병원들이 이윤을 위해 나서서 한 일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는 게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다. 게다가 사람들의 인식도 별로 안 좋다.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인데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많이 나

아졌지만 예전에는 좋지 않았다. 민간병원에 비해 후지다는 인식이 강해 보건소보다는 민간병원을 주로 이용했다. 큰 병원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과 삼성병원을 비교해보면 느껴지는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 10개 중 공공병원이 한 개 밖에 안 된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공공병원이 굉장히 적는데 그래도 우리의 3배 정도는 된다.

마지막으로 약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약제비는 약값을 말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쓰는 돈 중 약값에 쓰이는 돈이 너무 많다. 다른 선진국은 10~15%정도가 약값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약 30%가 약값으로 나간다. 대충 10조 원 정도나 된다. 약제비만 줄여도 건강보험의 지출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다. 과거 의약품 대부분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해서 환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약을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실제 시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다 엄격하게 의약품을 선별하고, 보험적용 품목을 철저히 관리해서 약제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무조건 잘 될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취지는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더 고민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

첫째, 사람들이 과연 1인 당 1만 1천 원씩을 낼지 걱정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좀 그럴 듯해 보이긴 하지만 ‘돈을 더 내겠다’는 운동이 실제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1인 당 1만 1천원을 한 집으로 계산해 보면 가구 당 평균 2만 8천 원 정도가 나온다. 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인데 적지 않은 부담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소득 가운데 5.33%를 보험료로 내는데 선진국은

9~10%를 내고 있고, 1인당 1만 1천 원씩 올려도 보험료 비율은 7.13% 정도로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해는 되지만 피부에 와 닿는지는 알 수 없다. 복지혜택을 많이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는 복지를 위해 돈을 더 내는 습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물론 1만 1천 원을 더 내면 보장성이 90%로 강화되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민간보험료로 내는 돈을 아낄 수 있으므로 훨씬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다.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문제 역시 호락호락 하지는 않다. 민간보험을 해지하는 게 맘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은 크게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 두 가지가 있다. 실손형 보험은 현재 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보험이고 2~3년에 한 번씩 보험료 내는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하겠다고 해도 별 손해가 없다. 하지만 정액형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적지 않다. 게다가 종신형 보험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망 시 1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쉽게 해지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정액형 가입자가 우리나라 전체 보험 가입자 중 60% 정도로 추정된다. 이 사람들은 보험의 '재테크' 측면에도 관심이 많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해도 개인들이 바로 그 재테크적인 이유 때문에 아까워서 민간보험을 쉽게 해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1만 1천 원만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민간보험은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다. 건강보험은 내가 100원을 내면 혜택은 그보다 훨씬 많이 보게 되어 있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직장가입자를 놓고 보면 노동자가 100원 내면 사용자도 100원을 내고 그러면 정부는 40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모인 240원을 가지고 개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쓰는 것이니까 자기가 낸 보험료의 2.4배의 혜택을 받는다. 나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업도 내고 정부도 내지만 혜택은 가입자만 보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보험은 가입자가 돈을 내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내는 게 아니다. 그

냥 가입자만 돈을 낸다. 그래서 민간보험사들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가입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이 혜택을 줄 수는 없다. 큰 민간보험사들은 대체로 가입자들이 낸 돈의 70%쯤을 보험료로 돌려준다고 그동안 선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진보신당이 조사해보니 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정적일 때 민간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사람들 대다수가 들고 있는 민간보험은 별로 혜택이 크지 않은 보험이라는 얘기다. 이러니 차라리 민간보험을 지금 해지하고 건강보험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고 재테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험료로 낼 돈으로 지금부터 차라리 적금을 붓는 게 이자가 훨씬 높다는 설명도 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이 안 좋고 따라서 수입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왜 개인이 먼저 돈을 더 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개인이 더 내면 기업과 국가가 자동으로 더 내야 한다는 것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예전부터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국가와 기업이 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은 별로 높지 않은데 집 구하랴, 사교육비 내랴 들어가는 돈이 많고, 공공요금도 해마다 오르는 마당에 건강보험료까지 더 내자고 하면 흔쾌히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 곳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더 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기업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이나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30%를 국가가 지원한다. 기업 부담의 경우도 우리는 사용자대 노동자의 부담 비율이 5:5인데 비해 프랑스는 94:6, 대만은 7:3이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이 먼저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을 하는 측에서는 그 동안 국가에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내면 기업이나 국가가 자동으로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 말도 맞긴 한데, 전적으로 옳은 건 아

니다. 개인이 보험료를 더 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5:5:2라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각자 얼마씩 낼지는 해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정부 측 사람들인 공익위원 8명, 의료서비스 공급하는 쪽 사람들 8명, 서비스 받는 쪽 사람들 8명 등 총 24명이 들어온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약사회 등에서 온 사람들이고, 의료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로, 그 대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음식업중앙회 등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우리가 먼저 1인당 1만 1천 원을 더 낼 테니 동의해 달라”고 하면 의료서비스 공급자 쪽이나 정부에서 동의해줄 리가 없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경총 같은 기업 대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동의해주는 순간 자기들도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정부가 내야 할 돈도 내지 않아 건강보험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정부 부담을 결과적으로 더 늘리는 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하면 무조건 지는 구조가 된다. 그냥 토론으로 해도 머릿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반대쪽이 우기기 시작하면 설득할 방법이 없다. 1만 1천 원을 가입자가 더 내도록 결정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사회운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국가와 기업에게 압력을 넣는 건 똑같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이나 무상접종은 개인이 먼저 돈을 낼 테니 기업과 국가가 따라오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실현이 됐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도 했고 제도정치 안에서 진보정당의 노력도 있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요구하는 쪽이 먼저 돈을 더 낸다는 정당성이 있다 해도 그 실현 가능성에서 더 쉽고 우월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떤 방식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는 해봐야 아는 일이다.

이 밖에도 다른 고민거리들이 적지 않다.

보험료를 인상시킨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결정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간의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누가 정권을 잡든, 재정 여건이 좋든 나쁘든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한다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 놓는 게 나을 수 있다. 진보신당이 (가칭)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 보험제도 아래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세력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걸 찬성할 이유가 없다. 즉 거대한 민간병원과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병원은 행위별 수가제, 비급여 무제한 보장이라는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한 돈 벌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돈 벌이가 더 쉬워진다. 민간보험회사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돈을 벌 수단 자체가 없어지므로 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강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큰 싸움이 날 수 있다. 지금 큰 싸움이 나지 않는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1만 1천 원을 올리긴 했는데 민간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의 로비로 보장성은 강화되지 않고 기존의 지출 구조만 그대로 남게 되면 괜히 돈만 더 내는 꼴이 된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돈 올려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하는 곳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현실에서 이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 없이 진행되는 단순한 캠페인성 운동은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기 쉽지 않다. 또 예전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무상의료'를 들고 나와 보장성 90%, 본인부담금 100만 원 이야기를 하는 일부 야당의 태도도 쉽게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 있다. 

아이쿱 생협만평

이동수



에너지 위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2011년 5월1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와 동시에 그린피스 조사결과 원전에서 50km 떨어진 바다에서 채취한 해조류에서 허용한도의 6~11배를 초과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대기 중에 한 번 방출된 방사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토양과 물, 생명체의 먹이사슬을 돌면서 계속 독성을 뿜어낸다. 원자력은 애초부터 사용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다.

심각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가려져 있지만 유가 상승도 심상치 않다. 2008년에 이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침에 겨울옷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러 갔더니 가격이 올랐다. 세탁소 주인은 “유가가 올라서 연료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한다. “아 맞다, 드라이클리닝도 석유로 하지...” 석유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보니 이처럼 유가는 우리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전력 생산의 34.1%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수입은 세계 5위이다. 현실로 다가온 ‘에너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에 너무 무심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값싼 에너지를 더 많이!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20년 동안의 에너지 계획을 미리 세운다. ¹ 200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4.67TOE ²

¹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08년 8월 27일 수립되었다.

² TOE는 석유환산톤으로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인데, 정부는 2030년이 되면 1인당 소비량이 6.18TOE로 3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에너지 수요전망을 높게 잡으면 거기에 맞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과도한 수요 예측이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는 셈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을수록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독일은 2030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3.65TOE로 잡아 2004년의 4.18TOE보다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을 기본으로 하는 엄격한 수요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노후 원전 7기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것도 평소에 철저한 수요관리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2010년 하반기에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제시했다.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년 사이에 GDP나 유가에 많은 변화가 발생해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미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할 때는 GDP 증가율, 유가 전망, 제조업 성장률, 인구증가율 등을 반영한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2010년 수정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8년 전망했던 수치보다 향후 GDP는 줄어들고, 유가는 상승하며, 제조업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구증가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수정한 전망을 제시했다. 그런데 모든 지표가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데,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6%에서 2.0%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8.0TOE로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³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 내용 비교 (2010년 12월)

	2008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10년 수정안	증가율
연평균 GDP증가율(연간)	3.7%	3.4%	
유가 전망(2030년)	119달러	127.2달러	

³ 정부는 이 원인을 “에너지다소비산업(조선·철강)이 2020년까지 급속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조선과 철강업체들이 에너지수요 전망치를 늘려 잡은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 성장률(연간)	3.5%	3.2%	
인구 증가율(연간)	0.03%	-0.02%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연간)	1.6%	2.0%	
2020년 에너지수요전망(백만 TOE)	311.6	343.2	10.1%
2030년 에너지수요전망(백만 TOE)	342.8	388.9	13.4%

2030년 유가 또한 127.2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이거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는데다 석유 고갈시점이 다가올수록 유가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가를 높게 전망할수록 에너지 수요량은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석유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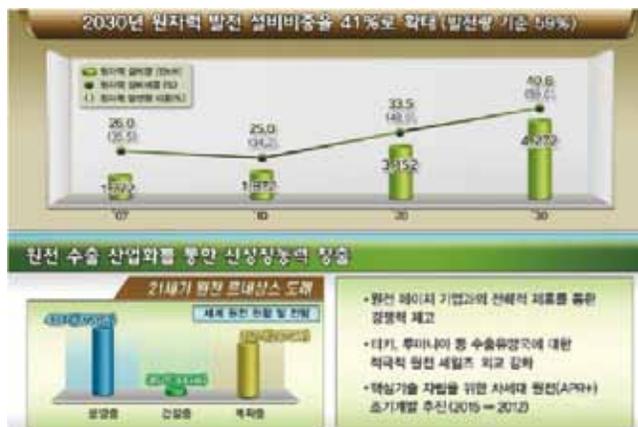
그렇다면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왜 이렇게 높게 잡았을까? 바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과 관련이 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온실가스의 84%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선언했다. BAU는 앞으로 늘어날 배출량을 감안해서 감축 목표를 잡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해 에너지소비 전망치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앞으로 배출될 온실 가스량이 많아지게 된다. 결국 배출 전망치를 지금보다 10% 높게 잡음으로써, 애초 BAU 대비 30% 감축 목표에서 10%는 숫자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숫자 조작을 정부가 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정부도 낮 뜨거웠는지 “2011년 조정 작업을 통해 상반기 중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차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대비 30% 감축목표
배출전망치를 10%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3기 더 짓는다”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지난해 12월 완공된 신고리 1호기를 포함해 모두 21기로 설비용량 기준 세계 6위이다. 원자력이 전력 생산의 3분의 1인 34.1%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 수립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 비중을 83%에서 61%로 줄이고, 원자력을 14.9%에서 27.8%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 전력 중 원자력 비중은 59%가 된다. 전력수급 기본계획(5차)에 확정된 것만으로도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13기나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원자력 비중 (지식경제부, 2008)
정부는 원자력 수출산업화를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0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정에너지’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전 과정(우라늄 채굴, 정제, 발전소 건설, 운영, 해체)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방사능 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결코 깨끗한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도 문제이다. 사용한 핵연료가 내뿜는 방사성 물질이 줄어들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백 년에서 수천, 수만 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원자력 전기의 단가는 1킬로와트(kWh)당 35.64 원으로 가장 비싼 양수발전(146.61원)의 4분의 1 수준이다.⁴ 그런데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비용이 있다. 바로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설계수명이 끝난다.⁵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 본 경험이 없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정확히 추산하기도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1~4호기의 경우 폐쇄하는데 20~30년 걸리고 비용만 6천 억 엔(약 8조 1천 억 원)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반경 30km 대피를 지시한 상황에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 시민들이 겪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도쿄전력은 이런 피해액을 다 보상할 수 있을까? 이처럼 원자력은 세상의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값비싼 에너지원인 것이다.

⁴ 에너지통계연보(2010) <http://www.keei.re.kr/keei/download/YES2010.pdf>

⁵ 2020년대에 들어서기 이전에도 2012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가 있고, 고리원자력발전소도 2017년이면 폐쇄해야 한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07년 수명 만료된 것을 10년 연장한 것이다. 1호기도 최근 전력계통 이상으로 멈춰서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원전 수명만료년도

기수	발전소명	용량(MW)	착공년도	상업운전개시년도	수명만료년도
1	고리1호기	587	1970	1978	2007
2	월성1호기	679	1976	1983	2012
3	고리2호기	650	1977	1983	2023
4	고리3호기	950	1978	1985	2024
5	고리4호기	950	1978	1986	2025
6	영광1호기	950	1980	1986	2025
7	영광2호기	950	1980	1987	2026
8	울진1호기	950	1981	1988	2027
9	울진2호기	950	1981	1989	2028
10	영광3호기	1000	1989	1995	2034
11	영광4호기	1000	1989	1996	2035
12	월성2호기	700	1991	1997	2026
13	울진3호기	1000	1992	1998	2037
14	울진4호기	1000	1992	1999	2038
15	월성3호기	700	1992	1998	2027
16	월성4호기	700	1992	1999	2029
17	영광5호기	1000	1996	2002	2041
18	영광6호기	1000	1996	2002	2042
19	울진5호기	1000	1999	2004	2043
20	울진6호기	1000	1999	2005	2044

(출처: 원자력발전 백서, 2009년)

전력낭비를 부추기는 원자력발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총 전력소비량 94,383기가와트(GWh)이던 것이 2009년 394,475GWh로 4배 이상 증가했다.⁶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급증했을까? 정부가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을 통해 원자력발전 건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⁶ 국민총생산(GDP) 대비 전력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1980년대 중반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했는데 수요가 적어 전력생산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했다. 1986년에서 1987년까지 전력공급 예비율이 55%까지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1980년부터 전기요금을 9차례나 인하하게 된다. 이때부터 자리 잡은 낮은 전기요금 체계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지금은 싼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에 더욱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의 전력판매량과 분기별 정책의 개입



(출처: Empirical Study: Correlation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Won-Young YangYi, 2005.)

1985년 정부는 심야시간에 남아도는 원자력 발전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심야전력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난방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기난방은 참으로 호사스러운 일이다. 석유 10리터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에너지 전환과 송배전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해 6리터는 사라지고 4리터만 전기로 전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난방의 에너지 효율은 34%로 등유난방(80%), 가스난방(85%)에 비해 매우 낮다. 전기를 난방연료로 사용할 수록 국가 전체로는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2002년 이후 2009년까지 등유 가격이 98% 오르는 동안 전기요금은 12%가 올랐다. 이러다 보니 2009년 전기 사용량은 2002년보다 42% 증가한 반면 등유 사용은 67% 감소했다. 겨울철 등유난방이 전기난방으로 전환되면서, 여름철 발생하던 전력피크가 겨울철에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기 먹는 하마는 여기 또 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

부분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당 73.69원으로, 1KW당 98.07원인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게다가 산업용경부하요금(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요금)은 주택용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산업계가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면서 전력소비가 크게 늘었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입는다. 공기업 한전이 입는 손실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전력다소비업체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는 셈이다. 이렇게 산업계의 전력소비가 늘어나면 원자력발전소를 또 짓고,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전력요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아온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대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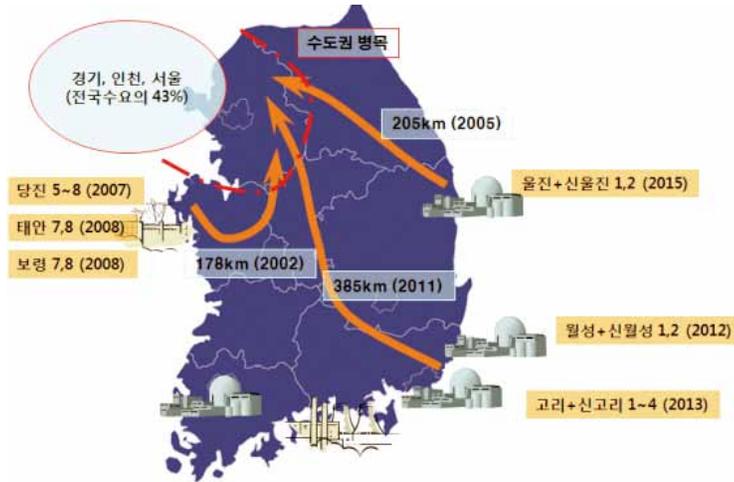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3.72%

우리나라 최대의 에너지 소비 도시인 서울에서는, 서울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과연 몇 %나 생산하고 있을까? 답은 3.72%이다. 나머지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이나 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는 당진, 태안에서 공급받는다. 서울시민들은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에 무심하다. 서울과 경기도의 전력수요 증가는 결국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더 많은 발전소를 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국 전력자립도

생산/소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3.72	199.6	1.02	229.1	0.18	3.01	49.16	24.4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2.18	7.36	343.1	6.02	296.4	200.8	191.5	69.07	

(출처: 국가에너지통계연보, 2008년)



전력 생산의 불균형-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다

요즘 밀양시민들은 765킬로볼트 고압 송전탑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 한국전력이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경남 일대에 공급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는데, 계획대로라면 69기의 철탑이 밀양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이 유발할지 모르는 암발생률 증가와 같은 건강 피해를 두려워한다. 또 수십 개의 철탑과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밀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땅값도 떨어뜨린다고 걱정한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동안, 누군가는 원자력발전소와 송전탑 근처에 살면서 전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기 생산 방식이 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전력생산에 대해 너무 무심했다. 콘센트에 코드를 꽂기만 하면 전기가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적 부가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 가난하고 척박한 지역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나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제 특정지역에 대형발전소를 건설해서 공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생산 방식을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기를 먼 거리로 송전하는 방식이 일으키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같은 대도시는 에너지 생산이 여의치 않다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자

지금까지 정부가 부르짖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원자력이었다. 그리고 이런 정부 방침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기공식에 참여했다. 심지어 독일을 방문한 대통령은 “클린에너지인 원자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다들까 지난 5월6일, 정부는 국내 원전 점검 결과 모두 안전하며, 고리 1호기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초지일관 ‘원전사랑’이다. 1970~80년대엔 수많은 노동자가 수출산업화 전선에서 희생되었고, 지금은 온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원전 수출산업화 정책에 저당 잡힌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 그리고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이 2012년이면 끝이 난다. 정부는 수명 연장을 시도할 것이고 우리는 수명 연장을 막아야 한다. 월성원자력 1호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숨어 있던 비용들을 지불하다보면 원자력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과 울진 등 추가 원전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

다. 원자력 사업을 안전하게 규제할 독립기구와 이러한 원자력 정책 결정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치권, 학자들이 참여하는 통로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자력이나 석유, 석탄 같은 에너지원 자체보다는 에너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에너지 서비스를 개선하면 적은 에너지로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방 하나를 밝히는 데 썼던 백열등을 에너지 고효율 전구로 교체해 같은 양의 전력으로 방 네 개를 밝힐 수 있다면, 전력소비량은 4분의 1로 줄어든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이 곧 에너지 생산인 셈이다. 어떤 에너지원을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 쓸 수 있을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시스템을 먼저 바꾸자는 말이다.

독일이 2017년 원전 완전 폐쇄를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력소비를 줄이고, 원전이 생산하던 전력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국민도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한다. 현재의 불합리한 에너지 요금 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세금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을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보다 에너지를 덜 쓰고, 좀 더 춥고 덥게 지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당분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에서 독립하며, 에너지 정책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비전만 제시되면 국민들은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원자력 사회로 내달려갈 때 다시 한번 멈춰 생각해볼 기회를 주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사회가 초래한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에너지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을 재생가능에너지 재단으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원자력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떼어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조성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이 돈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한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기를 쓰는 것만으로 원자력 광고비를 지불하는 셈이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을 '행복에너지'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고도 원자력을 행복에너지라 말할 수 있을까?

핵 위험의 공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재생가능에너지 재단으로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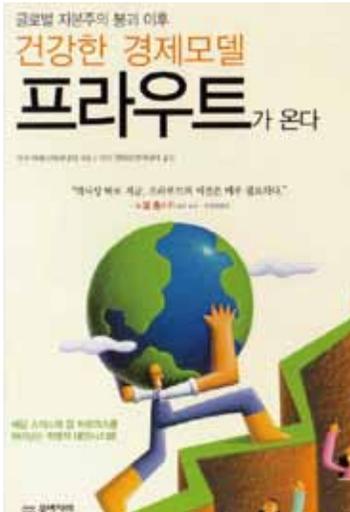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1996년부터 '각급 학교 원자력 관련 수정 반영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교과서에 표현된 원자력 관련 내용 수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착취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 실험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붕괴이후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를 읽고

오귀복 (아산YMCA생협 이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통찰력과 세계관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질적 풍요로움 이면에 존재하는 소외와 배제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소외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 성립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해방을 위한 다양한 이론과 실천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세상은 착취가 더욱 심화되어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고, 하루 1조 9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돈이 투기꾼들의 돈 노름에 사용되고 있다. 세

계 절반 인구의 1년 소득액을 넘는 금액이 상위 52명에게 집중되고 있는 세상, 임금 격차가 3만 배 이상이 현실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투자가 생산이 아닌 비생산의 영역에 집중되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동안, 세상의 절반 이상은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 성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대안은 없는가?

『글로벌 자본주의 붕괴 이후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항하는 정당하고 의미 있는 항의를 담고 있다.

프라우트는 사카르가 1959년 ‘사회와 개인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제시한 사회·경제·정치모델이다. 프라밭 란잔 사카르(1921~1990)는 고대의 영적 과학인 탄트라 명상을 가르치다 1955년 깨달음과 봉사를 목표로 하는 ‘아

난다 마르가'(Ananda Marga: 무한한 행복으로 가는 길)를 창설했다. 아난다 마르가는 전 세계적으로 3백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인도에서 가장 큰 수행·봉사 단체이다. 이 단체는 약 200여개 국가에서 교육, 예술, 구호, 환경, 명상 등 2천여 개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NGO다.

프라우트(PROUT: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는 진보적 활용론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노엄 촘스키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주목하고, 모든 이들의 복지를 위해 지구의 자원을 서로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프라우트가 “협동조합 중심의 경제민주주의다”라고 말하고 있다.

프라우트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진보가 아닌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착취를 통한 부의 집중이나 독재를 통한 사회의 무기력이 결국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가 역동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부의 집중을 막고 사람들의 창조적 잠재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고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스로의 복지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전체가 공동으로 진전하는 것을 목표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우주창조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적 속성들을 고려해 각각의 제도들과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프라우트의 핵심은 부의 집중을 제한하고 사회와 개인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에게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노동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기여도에 따라 분배의 차이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저 수준의 삶은 음식, 의복, 주거,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품목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고용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절히 보장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상향조정과 최고임금에 대한 통제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하나는 지방 분산을 통한 ‘경제적 민주화’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 경제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그들이 사는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선택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최저 생계에 필요

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구매력을 점진적으로 높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권리를 갖는 것과, 지역에서 거둔 이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체계’는 공적 영역과 협동 영역, 그리고 소규모 영역으로 구성된 산업구조다. 다른 영역의 기초가 되는 공적 영역은 교통, 동력, 화학, 국방 등의 사회 기간 사업으로, ‘이윤도 손실도 없는’ 원칙에 근거해서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협동 영역은 소비재생산이나 농업, 경공업 등에 지역주민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영과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분배의 평등성을 경험하고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규모 생산영역 또한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들의 창의성과 발상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서비스사업이나 문화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방식의 경영을 제안하고 있다. 사카르는 “자연은 결코 이 지구 자산의 어떤 부분도 특정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우주 창조의 이치에 따라 토지 또한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착취와 남용’이 아닌 ‘활용과 사용’의 관점으로 돌아가 황폐된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농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우트에서는 최소 수준 이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협동조합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혼작, 보충작, 윤작 등의 대안적 경작제도를 주장한다. 그 외에도 농촌개발전략, 산림보존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우트에서는 대중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생활수준과 지역공동체 간의 균형 있는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과, 개인 기본권의 보장 및 협동조합의 진흥 외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유지를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한 국가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정부의 역할을 감독할 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윤리적 지도자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 출마자들은 사회, 정치, 경제적 의식 수

준을 시험받아야 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프라우트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사카르는 영적인 혁명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드비프라(sadvipra: 정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형성을 예견하며, 이들이 사회의 안녕을 위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총체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정직, 용기, 헌신 및 사회를 위한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드비프라가 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진보를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상적’이라는 말은 실현 불가능할 때 흔히 쓰인다. 로버트 오웬의 ‘뉴 라나크의 실험’이 공상적이었던 것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사회전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실험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오웬은 세상을 향해 착취가 아닌 협동이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구성원의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협동조합은 지난 250년 전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제안되고 실험되었다. 여전히 우리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의미 있는 대항을 하고 있다고 본다. 프라우트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힘을 믿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사회 정치, 경제 구조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프라우트 제도는 협동조합 체제의 적용을 지지한다.

협동조합이 가지는 내적인 정신이 바로 ‘대등한 협동조합’(coordinated cooperation)이기 때문이다.

오직 협동조합 제도만이 인류의 보다 건전하고 통합된 진보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인간 사이의 완전하고도 영속적인 단결을 보장할 수 있다.

-P.R 사카르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협동조합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일본생협의 재난 대응

2011년 3월11일, 규모 9의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은 큰 재해를 입었다. ICA는 ‘일본재해복구기금’을 마련하여 일본 협동조합의 지원과 재건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ICA 폴린 그린회장은 기금마련을 위한 호소문에서 “일본의 협동조합들은 타자를 지원하는데 언제나 최전선에 있었다”며, “이번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본의 동료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농협연합회(JA)는 JA오후나토(지역농협)에서 ‘재앙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후쿠시마 현의 JA후쿠시마연합회의 병원 몇 곳은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도쿄의 일본수협연합회는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협동조합 진영은 이처럼 엄청난 고난의 시기에서 더욱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의 협동조합발전재단(CDF)은 지진 발생 사태에 대한 기금마련 논의에 착수하였으며 지진 발생 후 첫 주 동안 일본 협동조합 재건을 위한 기금마련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CDF는 자연 재해와 원전 피해가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모델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DF의 자금담당자인 엘렌 퀸(Ellen Quinn)은 “이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협동조합모델이 경제발전의 큰 수단으로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본협동조합들은 지진 직후부터 긴급재해대책본부를 마련하여 구호물자 전달, 지원모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동조합의 미래를 열 열쇠를 쥐고 있는 청년세대

COPAC(협동조합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위원회)과 ICA는 2011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인 2일, 세계협동조합의 날 주제를 ‘청년, 협동조합의 미래’(Youth, the future of cooperative enterprise)로 발표하였다. 이 주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평화, 인권 및 자유의 존경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ICA이사회 회원이자 청년 대표인 호세 안토니오 차베즈(Jose Antonio Chavez)는 “젊은 협동조합인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널리 알리고 축하하는 예술 및 음악 경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주 ICA는 7월에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협동조합에 관하여 토론하는 제3회 비디오 회담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협동조합 모델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 사업에 관한 학업은 학교 커리큘럼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대학교육프로그램에 간신히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여전히 청년사업가들에게 또 하나의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적이며 윤리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올해로 89회를 맞는 ICA국제협동조합의 날은 1995년부터 UN과 함께 기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www.ica.coop/activities/idc/2011.html 참조.

미래 그린에너지 정책의 필수 부문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략에 대변혁을 일으킬 필수 부분이다. 저명한 세계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교수는 “EU 정책자문역, 활동가, 전문가들은 즉각 협동조합을 통하여 재생 에너지체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1~2년 동안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의 가

격변동은 매우 불안정하며, 원자력은 이미 물 건너갔고 기후 변화는 바로 우리 문 앞까지 왔다.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왔다”고 그는 강조한다. 리프킨은 그의 책에서 세계에서 첫 번째 탈탄소도시(post carbon city)로서 자리 잡게 될 유럽의 주요 도시인 로마, 모나코, 위트레흐트, 샌안토니오와 텍사스의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저술하였다.

그는 우리가 화석연료 이후의 세상에 적응하지 않을 경우 인류의 생존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미래에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인터넷이나 무선 기술로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 수집하고 저장하는 사업과, 이러한 에너지들이 지능형 전력망시스템, 즉, ‘상호전력망’(inter-grid)을 통해 쉽게 공유될 수 있다고 리프킨은 설명하고 있다.

리프킨은 이 계획의 대규모 실행을 위하여 은행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그리고 주택협동조합 등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2007년에 저술한 EU의 5가지 주요 에너지 정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가 설명하는 주요 에너지 정책의 첫 번째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두 번째는 해당 장소에서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소규모 발전 시설을 건물 내에 설치, 세 번째로 단속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반구조에 재생에너지 사용, 네 번째는 에너지 망을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상호전력망’으로 변환, 마지막으로 ‘상호전력망’으로 재충전이 가능한 차량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협인 ‘펜윅 직공 조합’ 250주년 축하

펜윅직공조합(Fenwick Weavers Society)이 2011년 3월에 250주년을 맞이했다. 1761년 면직물직공들의 기술 향상을 도모한 16명이 설립한 이 조합은, 식품 및 서적의 대량 구매를 시작한 전 세계 첫 협동조합 가게를 개장하였다. 조합원의 편의를 위한 대량 구매는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작은 시작으로 협동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 중 하나가 되었다.

<2011 ~ 2012년 ICA의 주요일정>

2011년		
5월	5~6일	ICA이사회,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30~31일	ICA유럽지역총회, '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모스크바(러시아)
6월	28~29일	ICA주택위원회 심포지움, 이스탄불(터키) www.icahousing.coop
7월	28~29일	ICA 아프리카 협동조합각료회의, 빈트후크(나미비아)
8월	24~27일	ICA 조사위원회, '협동조합의 새로운 기회' 미켈리(핀란드) www.helsinki.fi/ruralia/ica2011
10월	26~28일	ICMIF(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 정기모임(격년), 도쿄(일본) www.icmif.org
	31일(변경가능)	2012년 국제협동조합의 해 공식 선언, UN 본부, 뉴욕(미국)
11월	1~2일	국제협동조합의 해 선언과 관련한 ICA활동, 뉴욕(미국)
	14~18일	ICA총회, 칸쿤(멕시코)
12월	21일	영국 세계협동조합의 해 선언
2012년 UN 국제협동조합의 해		
1월	20일	협동조합 국제회의(에티오피아)
5월		ICA유럽지역총회
10월	8~11일	2012세계협동조합 정상회의(캐나다)
11월	25~30일	ICA-AP지역총회, 고베(일본)
미정		ICAMI주지역총회
미정		ICA아프리카지역총회 및 제 10회 ICA아프리카각료회의, 키갈리(르완다)
10월	31일~11월 2일	제3회 ICA엑스포, 맨체스터(영국)

(출처: ICA Digest 73호 및 ICA eDigest 창간호(5월))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한 식품안전 운동이 자연스럽게 농업 지킴이로 이어졌으며, 농업 지킴은 곧 환경 지킴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비 기준을 바꾸는 활동과 사업, iCOOP생협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조합원이 되는 방법

1. 매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내고 생협 조합원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이 물품 유통마진이 거의 없이 이용하는 가격으로, 일반가에 비해 평균 20%가량 저렴합니다. (사)아이쿱(iCOOP)생협연대는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회비(조합비)를 내는 대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류효율을 높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확대를 통해 생산자는 생산안정이 가능하게 한 우리 생협의 제도입니다.

전화가입 : 1577-0014

인터넷 가입 : <http://www.icoop.or.kr>로 접속하여 상단의 [조합원가입신청]을 누르시거나 <http://www.icoop.or.kr/coopmall>로 접속 후 이용안내 → [조합원 가입신청]을 누르세요.

2. 매월 조합비를 내지 않고 생협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협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품을 보고 구입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생협물품에 익숙하지 못해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합비를 내지 않고 일반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협물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터넷 주문과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물류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조합원께서 일시적으로 조합비를 낼 수 없을 경우 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쿱(iCOOP)생협은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이쿱(iCOOP)생협 가입 및 상담 전화 : 1577-0014

자연드림 전국 매장 안내 : 1577-6009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



CO-OPERATIVES JOURNAL vol.3 Summer 2011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Understanding Co-operative from Diverse Angles :

Co-operatives from viewpoint of economics

Tae-in Jeong

Building plentiful trust is core value of co-operatives

Chan-youl Jung

Why co-operatives are sensitive to be large more than corporations?

Jong-ick Jang

Member participatory system in Japanese consumer co-ops

Shigeki Maruyama

Round-table: May expanding scale of primary consumer co-ops
make their values dimmer?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